

2024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4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2024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1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 • 5

1. 첫만남이용권 도입배경	7
2.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및 신청 현황	8
3. 첫만남이용권 이용실태	10
4. 2022년 만족도 조사와 비교	20
5.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22

0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 23

1. 배경과 문제제기	25
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26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에 대한 부모의 요구	27
4. 정책 제언	36

03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 • 39

1. 연구 필요성	41
2.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42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49
4.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53

04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 55

1. 배경 및 문제점	57
2.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사업(“한울타리유치원 사업”) 현황	58
3.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61
4.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65
5. 맺음말: 유보통합의 고려	69

05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과제 · 71

1. 서론	73
2. 해외 OECD 주요국 아동(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	75
3. 전문가 및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	76
4. 정책 제언	87

06 육아가구에서 자녀의 의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 · 91

1. 배경과 문제제기	93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인식	94
3.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96
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	97
5. 정책 제언	105

07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와 대응 과제 · 107

1. 문제제기	109
2. 긴급돌봄의 수요와 대응 실태	110
3. 정책 제언	121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¹⁾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SUMMARY

- 202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자녀 대상으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기분 좋은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2022년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대체로 하락했는데 금액부족을 불만족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음. 자녀수 1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 학력이 낮은 가구에서 주로 금액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음.
- 2024년부터 둘째 자녀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으므로(2023년 0.72명, 2024년 1분기 0.6명대) 첫째 자녀부터 금액 상향 검토를 제안함.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구소득을 고려해서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현행 보편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함.
- 출생신고와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 인터넷 세대인 젊은 부모들인 만큼 신청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앱을 개발, 보급하여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사용처, 잔액 등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1) 본고는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고의 인용글은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조사의 결과임.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첫만남이용권 도입배경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에 정책과제로 포함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입됨.

목적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초기 가정 내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24: 3).
 -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임(보건복지부, 2024: 3).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보건복지부, 2024: 4).
 -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 지급(보건복지부, 2024: 5).

나. 신청절차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지급방식

- 첫만남이용권 대상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임(보건복지부, 2024: 4).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된 아동도 포함됨(보건복지부, 2024: 4).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인 바우처 형태가 원칙이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함(보건복지부, 2024: 5).

첫만남이용권 이용 범위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이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성인용품, 면제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함(보건복지부, 2024: 6).
 -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 못함(보건복지부,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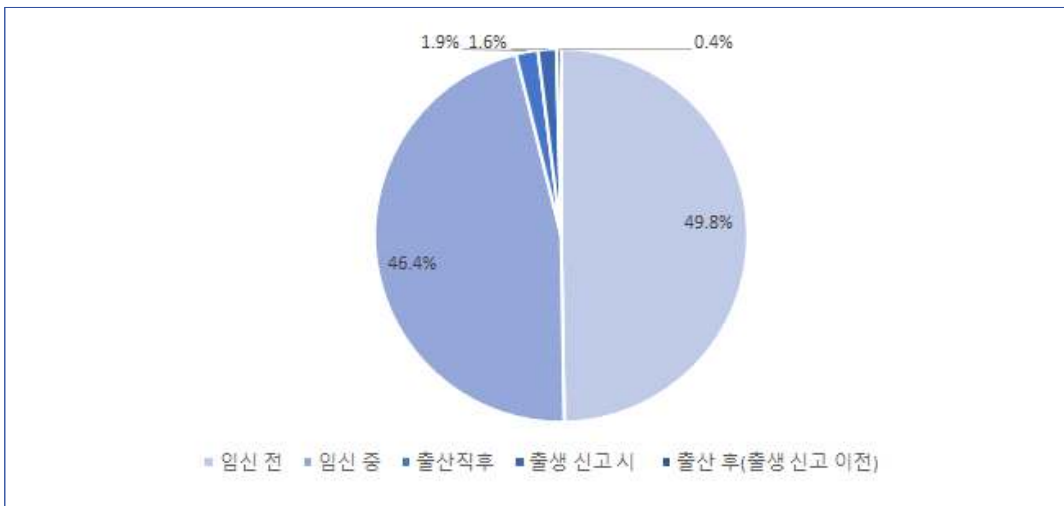
-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여 동사업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모색함.²⁾

2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및 신청 현황

▶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 대부분 출산 전인 임신 준비 시기(49.8%)와 임신 중(46.4%)에 첫만남이용권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그림 1]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30.

- 면담조사 참여자들도 임신 중에 임신, 출산 지원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례가 주를 이룸.

인터넷 검색하다가 임신했을 때 그 때 임신 출산 지원 신청하면서 그때 알았거든요. 아이 낳으면 첫만남 준다고....

임신 중이었어요.....전 그냥 핸드폰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였는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임신 중에 지자체 통해서 출산한 다음에 혜택 같은 거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갖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유튜브로 이것 저것 찾아 보니까 알았어요. 유튜브 검색해서 임신 한 4~5개월 그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2) 이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임. 설문조사는 2023년 첫만남이용권의 200만원 바우처를 전부 소진한 2,000명 대상으로 2023년 9월18일~9월25일동안 실시함.

면담조사는 FGI(집단심층면담조사)와 IDI(개별심층면담조사) 두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총 11명의 부모 대상으로 진행함.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함. 설문조사 결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약 70%).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신청함.

[표 1]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계(사례수)
전체	69.9	30.2	100.0(2,000)
권역			
서울/인천	59.3	40.7	100.0(408)
경기	68.9	31.1	100.0(605)
충청	79.3	20.7	100.0(232)
경북	70.1	29.9	100.0(194)
경남	76.6	23.4	100.0(273)
전라	70.4	29.6	100.0(179)
강원/제주	76.1	23.9	100.0(109)
$\chi^2(df)$		39.526(6)***	
재녀수			
1명	60.3	39.7	100.0(541)
2명	73.0	27.0	100.0(1,106)
3명 이상	74.8	25.2	100.0(353)
$\chi^2(df)$		32.816(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2.9	27.1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72.0	28.0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70.5	29.5	100.0(380)
500만원~800만원 미만	65.6	34.4	100.0(453)
800만원 이상	62.0	38.0	100.0(129)
$\chi^2(df)$		11.223(4)*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4	26.6	100.0(1,039)
맞벌이	65.0	35.0	100.0(896)
무직	80.0	20.0	100.0(65)
$\chi^2(df)$		19.717(2)***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1	24.9	100.0(342)
전문대졸	73.3	26.7	100.0(525)
4년제졸	67.3	32.7	100.0(917)
대학원 이상	63.9	36.1	100.0(216)
$\chi^2(df)$		14.09(3)**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만족도 조사 결과임.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34.

* $p < .05$. ** $p < .01$, *** $p < .001$.

▶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및 주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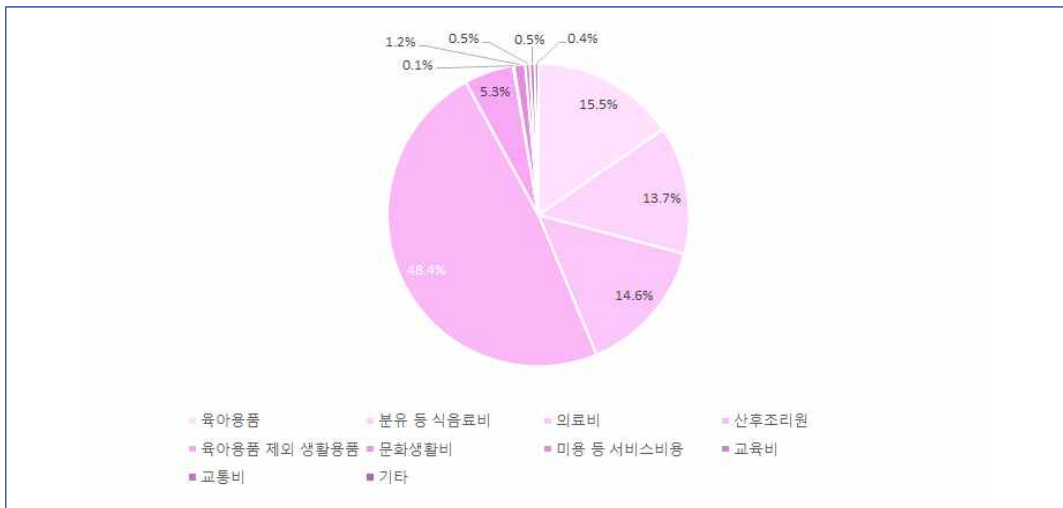
- 신청자는 자녀의 어머니(61.6%), 자녀의 아버지(38.4%), 자녀의 조부모(0.1%) 순임.
- 주 사용자는 대부분이 자녀의 어머니이며(94.5%) 자녀의 아버지는 5.1%로 일부이며 조부모 및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0.1%).

3 첫만남이용권 이용실태

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 48.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육아용품(15.5%), 의료비(14.6%), 식·음료비(13.7%), 생활용품(5.3%)의 순임.
-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부적절한 일부 사용처만 제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사용가능해서 사용처가 매우 다양함.

[그림 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현황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1.

- ▶ 주로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옷, 기저귀, 장난감 등) 등 상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음. 이들 항목들은 2022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순위로 나옴.
- 가장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은 수도권 거주자, 자녀수 1명,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용함.

- 2022년 조사에서도 산후조리원에 가장 많이 사용함.
- 자녀수가 많을수록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육아용품과 식·음료비의 지출 비중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이 절반을 상회한 반면, 경남, 전라, 강원/제주는 절반 이하로 사용하였고 대신, 육아용품, 식·음료비 사용비중이 높아서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를 수 있음.
- 고소득가구일수록 산후조리원 사용 비율은 높은 반면, 식·음료비, 육아용품, 생활용품의 사용 비율은 낮았음.
-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비용은 243.1만원(평균 이용기간 12.3일)으로 집계됨(이소영·최인선, 2021: 69, 47).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저소득가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낮은 것으로 해석됨.

[표 2]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단위: %

구분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산후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전체	15.5	13.7	14.6	48.4	5.3
연령					
20대	20.8	11.7	10.3	47.7	7.1
30대	15.1	13.5	14.4	49.0	5.3
40대	14.2	15.6	17.7	45.4	4.2
<i>F</i>	4.734**	1.990	4.107*	0.813	2.384
권역					
서울/인천	15.4	11.7	14.1	51.3	4.5
경기	14.0	12.1	12.4	54.6	4.5
충청	13.4	14.1	13.4	50.2	5.9
경북	13.1	13.4	15.9	49.0	6.3
경남	15.2	14.3	17.1	45.2	5.5
전라	21.1	17.5	20.9	31.4	5.9
강원/제주	23.7	21.1	11.3	33.8	7.7
<i>F</i>	4.702***	4.367***	3.015**	8.400***	1.349
자녀수					
1명	7.9	4.6	16.7	67.6	1.8
2명	17.6	15.5	13.9	43.6	6.2
3명 이상	20.4	21.8	13.2	34.0	7.6
<i>F</i>	38.767***	84.590***	2.444	75.624***	24.134***

구분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산후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3	15.5	16.0	42.0	6.4
300만원~400만원 미만	15.0	15.2	13.5	48.6	5.4
400만원~500만원 미만	17.2	12.8	14.5	47.3	5.4
500만원~800만원 미만	14.5	12.5	13.2	53.1	4.2
800만원 이상	8.5	6.7	18.0	59.9	3.5
<i>F</i>	4.123**	5.576***	1.331	5.763***	2.1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6.3	14.6	13.9	47.5	5.3
맞벌이	14.2	12.5	15.1	50.4	5.1
무직	20.0	15.0	17.0	35.3	7.0
<i>F</i>	2.909	2.483	0.690	3.651*	0.616
최종학력					
고졸이하	20.2	16.7	13.8	38.7	7.5
전문대졸	14.7	15.0	14.0	48.8	5.5
4년제졸	14.6	12.4	15.0	50.2	4.8
대학원이상	13.5	11.1	15.3	54.7	3.3
<i>F</i>	5.446***	5.143**	0.284	6.881***	4.763**
2022년	26.8	12.7	18.3	30.7	1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만족도 조사 결과임.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1.

* $p < .05$, ** $p < .01$, *** $p < .001$.

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범위가 넓다보니, 해당 자녀뿐 아니라 부모, 가족을 위해 사용가능함. 이에 첫만남이용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알아봄.

- 가장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은 해당 자녀와 가족(본인포함)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응답함.
- 육아용품, 식·음료비, 의료비, 산후조리원, 교육비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가족(본인 포함)보다 더 많았음.
 - 교육비는 응답 사례수가 37명에 불과함. 해당 자녀는 신생아이므로 교육비로의 사용이 적을 수밖에 없음.
-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문화생활비, 서비스비용, 교통비 등은 가족(본인 포함)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

[표 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항목	사용대상		사례수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육아용품(옷, 기저귀, 장난감 등)	93.6	15.0	(838)
식음료비(분유, 이유식, 식비 등)	76.6	46.4	(761)
의료비(병원, 약국 등)	76.3	48.4	(744)
산후조리원	68.7	62.5	(1,132)
교육비(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64.9	54.1	(37)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54.6	78.1	(392)
문화생활비(영화, 연극, 여행 등)	40.9	77.3	(22)
서비스비용((개인관리 목적의 스포츠센터, 헤어샵, 마사지 등)	10.3	92.6	(68)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29.4	94.1	(85)
기타	61.5	65.4	(26)

다.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의 편리성 등

- 신청방법,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 기간, 전반적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신청 방법이 평균 4.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기간(4.40점), 이용 가능 업체/물품(4.36점)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 2명 및 3명 가구가 자녀수 1명보다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이전 출산 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됨.

가계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죠. 첫째, 둘째랑 비교했을 때는 200만원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일단은 진짜 좋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저귀 값에서 200만원이 되는 거니까 좋죠……
- 대체로 고소득가구, 맞벌이가구, 고학력가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음.
 - 2022년 조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정의 만족도가 4.8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300만원 가정이 4.74점으로 가장 낮았음(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22).

[표 4]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및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신청방법	이용 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전반적 만족도	사례수
전체	4.49	4.36	4.40	4.47	(2,000)
자녀수					
1명	4.43	4.27	4.29	4.38	(541)
2명	4.55	4.41	4.47	4.54	(1,106)
3명 이상	4.37	4.32	4.35	4.42	(353)
<i>F</i>	8.020***	4.391*	6.628**	6.63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2	4.27	4.28	4.40	(524)
300만원~400만원미만	4.49	4.32	4.39	4.45	(514)
400만원~500만원미만	4.55	4.44	4.47	4.53	(380)
500만원~700만원미만	4.48	4.41	4.45	4.51	(453)
800만원 이상	4.56	4.45	4.51	4.53	(129)
<i>F</i>	1.688	2.87*	3.081*	1.8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4.45	4.31	4.34	4.41	(1,039)
맞벌이	4.55	4.43	4.48	4.56	(896)
무직	4.26	4.15	4.18	4.32	(65)
<i>F</i>	6.419**	6.246**	7.024***	8.10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47	4.25	4.26	4.37	(342)
전문대 졸	4.43	4.30	4.32	4.40	(525)
4년제 졸	4.51	4.40	4.45	4.52	(917)
대학원 이상	4.55	4.47	4.58	4.62	(216)
<i>F</i>	1.526	3.913**	6.928***	5.972***	
2022년		4.72		4.79	(2,000)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5.

* $p < .05$, ** $p < .01$, *** $p < .001$.

- 전반적 만족도는 2023년 4.47점으로 2022년 4.79점 대비 다소 떨어짐. 그러나 2023년 면담조사에서는 참여자 중 대부분(11명 중 8명)이 5점 만점의 평가를 함(표 5 참조).
- 3점의 낮은 만족도를 준 사례 5도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은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해서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이윤진 외, 2023; 51).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무조건 약국 아니면 병원 이런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첫만남은 다 되는 거니까……사용하기도 편하고(사례 5)

- 4점의 만족도를 준 사례 6도 첫만남이용권은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함.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이라 만족도가 센 것 같아요.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게 되면서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가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요. 금액적으로는 아동수당이지만 기분 좋은 거는 첫만남(이용권)이에요(사례 6).

[표 5] 면담조사 참여자들의 이용만족도 및 이유

사례	5점 척도	이유
1	5점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라 매우 좋음
2	5점	임신 초기에 돈 들 곳이 많은데 알차게 육아용품 및 조리원에서 알뜰하게 잘 썼고 금액이 적지 않아 만족함
3	5점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 증가 및 각종 육아용품 구매 비용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서 매우 만족함
4	5점	편의성 즉시 사용 및 잔액 알림 등
5	3점	금액이 너무 적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낮아졌기 때문임.
6	4점	카드 결제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되어 잔액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좋았음. 임신부 교통비 바우처가 남아있는경우 첫만남이용권이 먼저 결제되어 기간이 더 짧은 임신부 교통비를 쓰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빠른 기간 내에 소비하게 됨
7	5점	사용처가 다양해서 좋음
8	5점	와이프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첫만남이용권으로 큰 돈 안들어가고 산후조리해서 편했음
9	5점	다른 바우처(지역 제한, 오프라인 등)에 비해 높은 사용처 신청의 편의성(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적당한 금액(육아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적당)
10	5점	육아용품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몰랐었음, 살고 있는 동네 특성상 길이 좋지 않아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서스펜션이 좋은 유아차가 필요했는데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 나라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기와 산책할 수 있는 유아차를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금액임.
11	4점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서 가계운영이 어려운데 도움이 됨.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6.

▶ 첫만남이용권의 불만족 이유

- 앞서 문항에서 불만족 답변을 한 사례(284명)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77.1%)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다음으로 바우처의 사용처 제한(32.7%), 자녀 출산 후에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바우처 금액 입금 시기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들어온 것으로 면담조사에서는 확인됨.
- 면담조사에서 첫만남이용권 자체의 불만족보다는 이 지원이 생기면서 기존의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없어져서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첫째 때는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 첫만남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지자체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를 응답한 가구를 살펴보면, 20대(87.5%), 자녀수 1명(80.2%), 월소득 300~400만원 미만(82.7%), 무직(93.3%), 전문대졸(79.4%) 가구임.
 - 자녀수가 적고, 가구소득이 낮고(무직 포함),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가구에서 금액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

[표 6]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져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전체	77.1	32.7	27.8	25.7	16.9	1.8	1.5	(284)
연령								
20대	87.5	25.0	29.2	37.5	25.0	4.2	0.0	(24)
30대	75.3	30.7	28.8	25.6	17.2	1.9	1.4	(215)
40대	80.0	46.7	22.2	20.0	11.1	0.0	2.2	(45)
자녀수								
1명	80.2	24.2	26.4	30.8	16.5	3.3	1.1	(91)
2명	75.4	34.3	32.1	23.9	19.4	0.7	2.2	(134)
3명 이상	76.3	42.4	20.3	22.0	11.9	1.7	0.0	(5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3.6	39.6	27.5	28.6	17.6	3.3	1.1	(91)
300만원~400만원미만	82.7	25.9	29.6	28.4	18.5	0.0	1.2	(81)
400만원~500만원미만	82.2	35.6	22.2	15.6	8.9	2.2	0.0	(45)
500만원~700만원미만	73.1	30.8	32.7	23.1	19.2	0.0	0.0	(52)
800만원 이상	66.7	26.7	20.0	33.3	20.0	6.7	13.7	(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9	34.9	29.7	24.4	16.3	1.7	1.7	(172)
맞벌이	73.2	29.9	20.6	24.7	16.5	2.1	1.0	(97)
무직	93.3	26.7	53.3	46.7	26.7	0.0	0.0	(15)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최종학력								
고졸이하	76.6	31.3	37.5	28.1	18.8	4.7	0.0	(64)
전문대졸	79.4	34.0	27.8	20.6	19.6	0.0	1.0	(97)
4년제졸	75.0	34.6	24.0	28.8	15.4	1.9	2.9	(104)
대학원이상	78.9	21.1	15.8	26.3	5.3	0.0	0.0	(19)

자료: 이윤진·김지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p.47-48.

라. 첫만남이용권이 자녀계획 영향 정도

▶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489명)에게 첫만남이용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물은 결과, 65.2%가 “그렇다(약간 22.9%+매우 42.3%)”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그러나 2022년의 4.25점 대비 긍정적인 영향력이 떨어짐.

첫만남이 도움은 되지만 이 정책으로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첫만남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그런 정책이 출산 계획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집을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는 출산 안 할 것 같아요.

- 향후 자녀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가구를 변인별로 보면, 20대, 자녀수 2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임.
 - 20대, 자녀수 1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 등이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이 적어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집단임(표 6 참조). 그런데 이들 가구 중심으로 추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은 모순된 결과이나,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이들 가구 중심으로 추가출산을 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첫만남이용권의 자녀계획 영향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5.7	11.7	17.4	22.9	42.3	3.84	100.0(489)
연령							
20대	6.8	4.1	12.2	33.8	43.2	4.03	100.0(74)
30대	5.4	13.9	17.4	22.0	41.3	3.80	100.0(373)
40대	7.1	4.8	26.2	11.9	50.0	3.93	100.0(42)
$\chi^2(df)/F$			17.333(8)*			1.136	
자녀수							
1명	5.1	13.3	16.8	25.3	39.6	3.81	100.0(316)
2명	7.1	9.0	16.8	19.4	47.7	3.92	100.0(155)
3명 이상	5.6	5.6	33.3	11.1	44.4	3.83	100.0(18)
$\chi^2(df)/F$			10.116(8)			0.37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7.2	15.9	23.2	50.7	4.12	100.0(138)
300만원~400만원 미만	5.1	12.8	14.5	23.9	43.6	3.88	100.0(11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5	9.2	21.8	19.5	37.9	3.63	100.0(87)
500만원~700만원 미만	5.5	14.5	16.4	24.5	39.1	3.77	100.0(110)
800만원 이상	5.4	21.6	24.3	21.6	27.0	3.43	100.0(37)
$\chi^2(df)/F$			22.407(16)			3.453**	
맞벌이 여부							
외벌이	6.3	9.2	16.8	21.8	45.8	3.92	100.0(238)
맞벌이	5.6	14.2	16.7	24.0	39.5	3.78	100.0(233)
무직	0.0	11.1	33.3	22.2	33.3	3.78	100.0(18)
$\chi^2(df)/F$			8.078(8)			0.758	
최종학력							
고졸이하	4.3	10.8	12.9	25.8	46.2	3.99	100.0(93)
전문대졸	6.9	13.9	13.9	16.8	48.5	3.86	100.0(101)
4년제졸	6.5	11.7	21.2	20.8	39.8	3.76	100.0(231)
대학원이상	3.1	9.4	15.6	35.9	35.9	3.92	100.0(64)
$\chi^2(df)/F$			15.586(12)			0.878	
2022년	3.2	5.6	12.3	21.1	57.8	4.25	100.0(781)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p.56-57.

▶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와 추가 출산 의향

- 만약,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확대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20대, 자녀 1명, 저소득가구, 무직, 고졸이하 가구(앞서 현재 바우처 금액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가구들)에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전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할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적 응답이 46.4%,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7.7%로 약 10%가까이 많이 나왔고, 점수로 환산하면 3.09점임(5점 만점).
 - 그러나 2022년의 3.40점 대비 긍정적 응답은 낮게 나옴. 2023년 설문조사에서 금액을 확대해도 추가 출산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전체 응답이 22.6%로, 2022년 16.2%에 비해 추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아짐.

만약 첫만남을 두배로 준다고 해도(400만원) 더 낫을 생각은 없어요.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표 8]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22.6	15.1	16.0	23.3	23.1	3.09	100.0(2,000)
연령							
20대	12.2	7.0	19.2	23.8	37.8	3.68	100.0(172)
30대	22.5	15.8	15.0	23.7	23.1	3.09	100.0(1,522)
40대	29.1	16.3	18.6	20.9	15.0	2.76	100.0(306)
$\chi^2(df)/F$			51.027(8)***			21.363***	
자녀수							
1명	6.1	9.2	14.2	32.3	38.1	3.87	100.0(541)
2명	26.2	18.6	17.7	19.9	17.5	2.84	100.0(1,106)
3명 이상	36.5	13.0	13.0	19.8	17.6	2.69	100.0(353)
$\chi^2(df)/F$			227.837(8)***			115.3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1	13.4	14.9	23.3	29.4	3.31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24.1	13.8	15.0	23.0	24.1	3.09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7	15.8	17.4	22.1	20.0	2.97	100.0(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23.0	16.6	17.4	24.3	18.8	2.99	100.0(453)
800만원 이상	23.3	20.2	14.7	24.0	17.8	2.93	100.0(129)
$\chi^2(df)/F$			27.173(16)*			4.27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23.7	15.3	14.5	22.1	24.4	3.08	100.0(1,039)
맞벌이	21.8	15.4	17.3	24.8	20.8	3.07	100.0(896)
무직	16.9	7.7	20.0	20.0	35.4	3.49	100.0(65)
$\chi^2(df)/F$	16.003(8) [*]					2.459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9.9	15.5	20.8	31.6	3.30	100.0(342)
전문대졸	26.1	14.7	17.3	21.0	21.0	2.96	100.0(525)
4년제졸	21.3	17.4	16.0	23.9	21.4	3.07	100.0(917)
대학원 이상	20.4	14.4	13.0	30.1	22.2	3.19	100.0(216)
$\chi^2(df)/F$	35.023(12) ^{***}					3.972 ^{**}	
2022년	16.2	12.1	16.6	25.6	29.6	3.40	100.0(2,000)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0.

* $p < .05$, ** $p < .01$, *** $p < .001$.

2022년 대비 불만족 응답이 높아진 주된 이유

- 첫만남이용권 금액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반등함(이윤진 외, 2023: 59).

육아용품은 엄청 비싸요. 분유가 한달 사이에 5천원이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비조차 안돼요. 반값도 안돼요.

4 2022년 만족도 조사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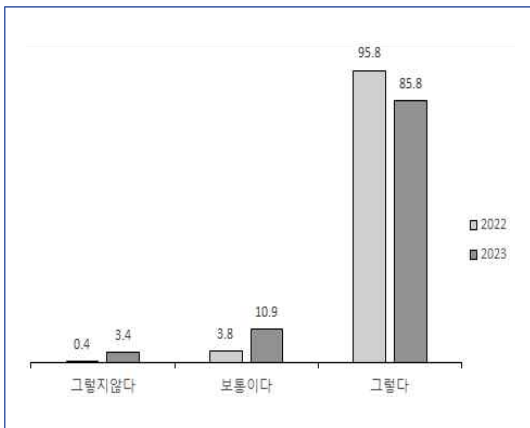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및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022년 4.79점, 2023년 4.47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응답이 3배 정도 증가함.

-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이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약 72%로 높게 나왔으나, 2022년에 비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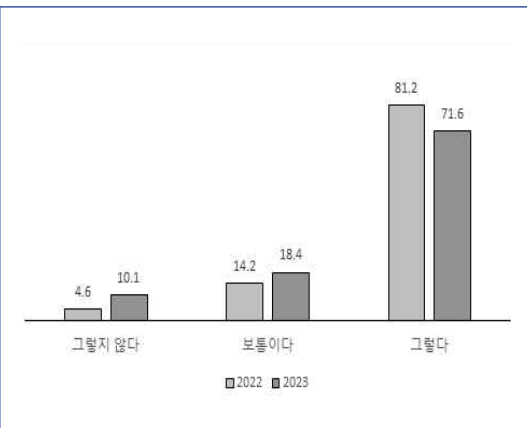
[그림 3] 2022년·2023년 만족도 비교

단위: %



[그림 4] 2022년·2023년 가계경제 도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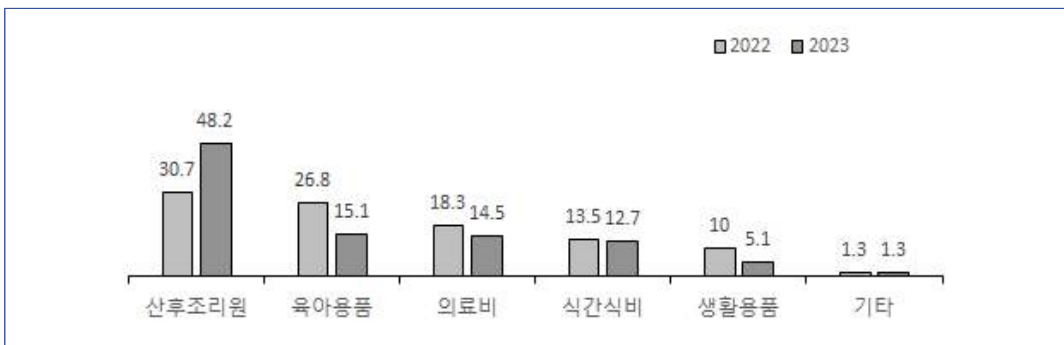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8.

▶ 첫만남이용권 주 사용처

- 주 사용처는 2022년, 2023년 모두 ‘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남. 2022년 대비 2023년의 산후조리원 사용률이 약 18%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5]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비교

단위: %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8.

5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 첫만남이용권 현행 이용방식 유지

- 지급처럼 일시 지급, 사용기간 제한(발급 후 1년 이내 소진), 육아와 무관한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 등의 현행 방식에 대해 부모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기초를 유지함.

▶ 보편적 지원 유지하되 지원 금액 상향 및 저소득가구 추가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바우처 300만원으로 상향됨. 금액 증액이 추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기대하나,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합계출산율 제고 등)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움.
 - 합계출산율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4년 1분기 0.6명대(세계일보, 2024.2.28.)
- 본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서도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에 대해 주로 자녀수 1명, 외벌이가구, 저소득가구에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하고, 저소득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함.

▶ 출생신고 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일부 병원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 같은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향후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지급까지 며칠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비용 지급 시,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되지 않아서 개인카드(또는 현금)로 먼저 결제하고, 발급받으면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해서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확대: 관련 앱 개발 및 보급

- 앞서 제안한 “바로 지급 방식”과 연결되는 방안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므로 출생신고와 연계된 앱(APP)을 개발, 보급할 것을 제안함.
- 앱을 통해 신청하고, 잔액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편리성을 제고함.

▶ 첫만남이용권의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
- 첫만남이용권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정책임. 즉, 기존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으로, 현재 첫만남이용권도 유관 정책들 예컨대, 영아기에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과 결합하여 보다 진화된 방식(예: 바우처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 등)의 생애초기 육아지원정책을 모색 가능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2024). 2024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세계일보(2024.2.28.). '국가소멸' 다가온다...2024년 출산율 0.6명대 눈앞.
 - 이소영·최인선(2021).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미간행.
-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¹⁾

김지현 연구위원

SUMMARY

-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가정, 보육·교육기관, 지역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정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여, 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과 어려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하는 노력들을 파악함.
-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개선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영역,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걱정하는 점 등을 살펴보고 부모가 인식하는 지원 영역을 파악해 봄.
-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 환경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본 원고는 2023년 진행된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배경과 문제제기

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필요성 증대

▶ 코로나시기 대면 경험의 부족으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증가

- 최근 3년간 COVID19 시기를 겪고 아동들이 타인과의 교류를 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정서 측면의 역량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었음.
-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어려움 및 자기정서조절, 정서표현의 어려움 등 사회성과 정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음(황혜영·김수윤, 2022).
- 또한 2024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 전문가 대상으로 코로나시기의 유아 및 아동의 발달문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코로나 영향으로 유아 및 아동의 발달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성'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함(김리진·조선화·채은영·홍서은, 2024).

▶ 또한, 인지교육,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 증가.

-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본적인 정서에서부터, 두려움, 수줍음, 낮가림, 죄책감, 등의 정서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정서의 발달은 특별한 학습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
- 이에 반해, 언어, 수리 능력은 적절한 연령대의 발달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을 진행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지나친 인지교육을 강조하는 풍토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인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의 한계

▶ 사회·정서발달이 성장과 함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모와 기관의 관심과 교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 사회·정서발달은 신체, 언어, 인지 발달과 함께 아동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발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신체, 언어, 인지발달과는 달리 사회·정서적 발달은 연령별 발달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부모입장에서의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또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의 인식이 있다하더라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는 뚜렷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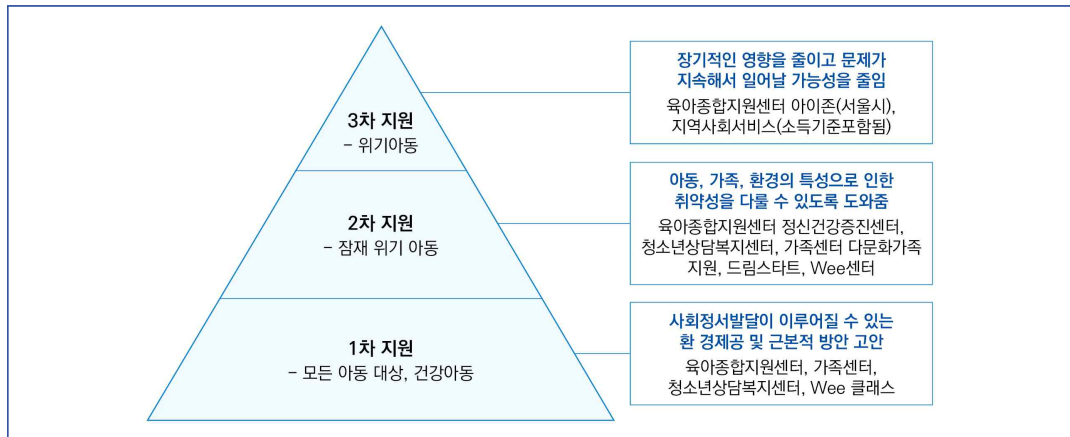
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가. 사회·정서 발달 지원 대상 아동 구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지원의 대상을 다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김지현·조숙인·김영민, 2023: 64).

- 현재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건강한 발달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건강아동 대상의 지원 (1차 지원)
-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가정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사회·정서행동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검사 및 상담 등의 지원 (2차 지원)
- 사회·정서행동 검사에서 소견서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아동 대상의 집중 치료 등의 지원 (3차 지원)

[그림 1] 아동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따른 분류



자료: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그림을 인용함. p.64.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아동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틀의 내용을 응용하여 연구진이 구성함.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overview/framework/> (2023. 9.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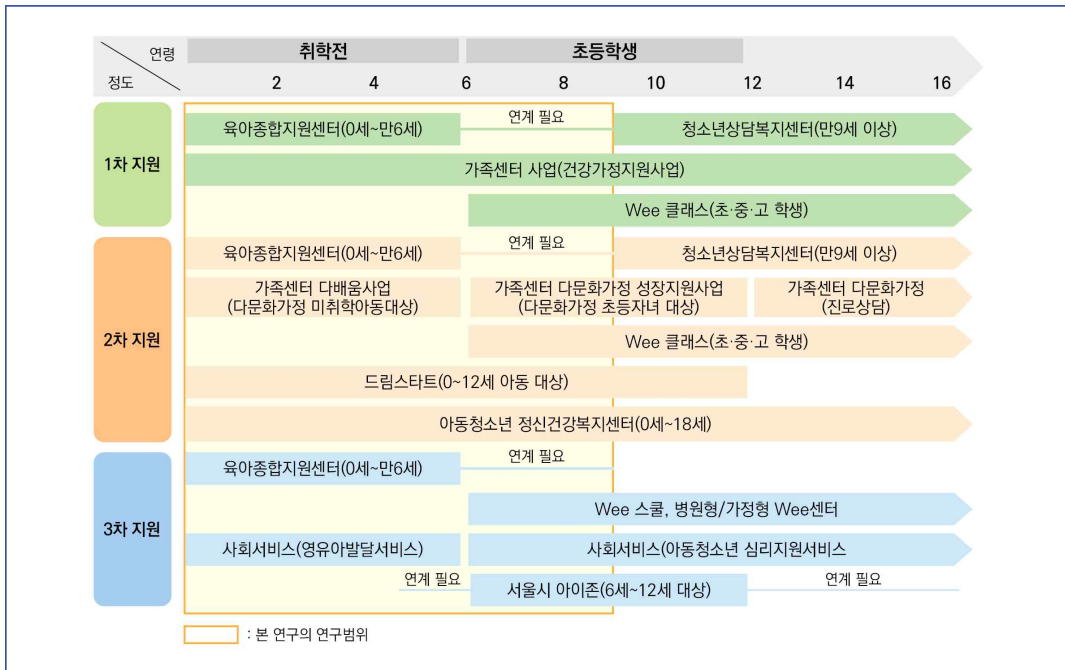
나. 연령별 지역사회 유관기관 서비스 지원 내용

아동(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하였음.

-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의 경우는 영유아대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센터별로 있을 경우에 한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심리상담 지원은 만 9세부터가 대상이어서 실질적으로 만 6-8세까지의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사각지대로 파악됨.

-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Wee 클래스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용대상은 모든 아동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의 관심군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림 2]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원 체계



자료: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 연구의 사회·정서발달 연령별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체계도를 인용함. p.238.

-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의 드림스타트 사업, 다문화가족 대상의 문화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음.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에 대한 부모의 요구

▶ 본 연구에서는 24~36개월 미만 영아 자녀 가구가 90명, 36개월~미취학 유아 자녀 가구가 618명, 초등학생 1~3학년 자녀 가구가 704명으로 총 1,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정서 발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조사의 목적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인식, 이해, 걱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함임.

가. 부모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인식

- ▶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묻은 질문에는 전체의 90.2%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의 94.2%, 아버지의 83.3%가 들어보았다고 하여 어머니의 인식이 높았음.

[표 1] 사회·정서 학습의 인지도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90.2	9.8	100.0(1,412)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94.2	5.8	100.0(890)
아버지	83.3	16.7	100.0(522)
$\chi^2(df)$	43.434(1)***		

- ▶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전체의 49.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46.0%)보다 초등저학년(53.8%)이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2]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0.4	11.5	38.2	49.9	100.0 (1,412)	4.4(0.7)
아동 연령							
영유아	0.0	0.7	11.6	41.7	46.0	100.0 (708)	4.3(0.7)
초등저학년	0.1	0.0	11.4	34.7	53.8	100.0 (704)	4.3(0.7)
			14.823(4)**				-2.4*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0.0	0.2	8.5	33.9	57.3	100.0 (890)	4.5(0.7)
아버지	0.2	0.6	16.5	45.4	37.4	100.0 (522)	4.2(0.7)
$\chi^2(df)/t$			58.462(4)***				7.7***
학력							
고졸	0.0	0.0	20.5	37.7	41.8	100.0 (146)	4.2(0.8)
대졸	0.1	0.4	10.6	38.0	51.0	100.0 (1,059)	4.4(0.7)
대학원 재학 이상 /기타	0.0	0.5	9.7	39.6	50.2	100.0 (207)	4.4(0.7)
$\chi^2(df)/F$			15.098(8)				4.4*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0.3	0.9	15.6	38.3	44.9	100.0 (334)	4.3(0.8)
400~600만원 미만	0.0	0.2	11.8	37.5	50.5	100.0 (549)	4.4(0.7)
600~800만원 미만	0.0	0.3	8.3	41.1	50.3	100.0 (302)	4.4(0.7)
800만원 이상	0.0	0.0	8.8	35.7	55.5	100.0 (227)	4.5(0.7)
$\chi^2(df)/F$			20.554(12)				4.3**

* $p < .05$, ** $p < .01$, *** $p < .001$

주: 5점 척도임.

▶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정서 증진을 위해 하는 노력을 물어보았는데, 1순위 응답 기준 자녀와의 대화노력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노력이 35.2%, 보육교육기관이용이 24.9%, 또래친구 놀이기회 제공이 13.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녀와 대화노력이 39.5%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학원 이용이 19.7%, 또래친구 놀이기회 제공이 16.2%로 다음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을 떠나 자녀와 대화를 통한 사회·정서적 능력함양을 위한 노력을 가정에서 하고 있으며, 보육교육기관이나 예체능 학원 또는 또래친구놀이 기회제공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함.

[표 3] 자녀의 사회·정서 증진을 위해 하는 노력

단위: %(명)

구분	보육 교육 기관 이용	예체능 학원 이용	또래친구 놀이 기회 제공	가족 여행	자녀와 대화노력	전문 상담 기관 이용	아무 노력 하지 않음	계(수)
1순위 전체	16.7	14.7	15.0	11.8	37.3	3.4	1.1	100.0(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4.9	9.6	13.8	12.6	35.2	2.5	1.4	100.0(708)
초등저	8.5	19.7	16.2	10.9	39.5	4.3	0.9	100.0(704)
$\chi^2(df)$					89.030(6)***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17.2	11.6	14.3	11.5	40.7	3.5	1.3	100.0(890)
아버지	15.9	19.9	16.3	12.3	31.6	3.3	0.8	100.0(522)
$\chi^2(df)$					25.322(6)***			
취·학업 상태								
맞벌이	16.6	16.9	14.8	11.7	35.1	4.1	0.7	100.0(675)
홀벌이	15.8	12.2	15.2	11.9	40.7	2.7	1.6	100.0(691)
둘 다 미취업	32.6	19.6	15.2	10.9	19.6	2.2	0.0	100.0(46)
$\chi^2(df)$					25.132(12)*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21.6	14.4	17.4	8.1	33.8	3.3	1.5	100.0(334)
400~600만원 미만	15.1	13.5	15.8	12.8	37.7	3.6	1.5	100.0(549)
600~800만원 미만	16.2	19.2	13.6	12.3	35.1	3.3	0.3	100.0(302)
800만원 이상	14.1	11.9	11.5	14.1	44.5	3.1	0.9	100.0(227)
$\chi^2(df)$					29.268(1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8.7	16.7	14.6	11.4	30.6	7.3	0.7	100.0(604)
경험 없음	15.2	13.1	15.3	12.0	42.3	0.5	1.5	100.0(808)
$\chi^2(df)$					67.420(6)***			
1+2순위 전체	24.3	30.3	38.2	36.6	58.6	9.1	1.1	100.0(1,412)

* $p < .05$, *** $p < .001$.

나.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한 발달 및 양육 영역

- ▶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및 양육 영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1순위 전체 기준으로 57.1%가 사회·정서발달이 가장 중요하고, 생활습관형성/유지가 25.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 자녀보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부모보다 고졸 이상인 부모가, 사회·정서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 영역

단위: %(명)

구분	생활습관 형성/유지	신체 발달	사회·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계(수)
1순위 전체	25.2	8.9	57.1	5.2	3.7	100.0(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5.3	9.6	55.1	4.8	5.2	100.0(708)
초등저	25.1	8.1	59.1	5.5	2.1	100.0(704)
$\chi^2(df)$			11.457(4)*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27.2	7.2	58.2	4.0	3.4	100.0(890)
아버지	21.8	11.7	55.2	7.1	4.2	100.0(522)
$\chi^2(df)$			18.306(4)**			
학력						
고졸 이하	24.7	11.6	47.9	4.1	11.6	100.0(146)
대졸 이하	25.3	7.8	58.7	5.6	2.5	100.0(1,059)
대학원 재학 이상 /기타	25.1	12.1	55.1	3.9	3.9	100.0(207)
$\chi^2(df)$			37.926(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25.3	9.9	53.3	5.3	6.1	100.0(604)
경험 없음	25.1	8.0	59.9	5.1	1.9	100.0(808)
$\chi^2(df)$			21.169(4)***			
1+2순위 전체	51.4	23.7	83.4	27.9	13.6	100.0(1,412)

* $p < .05$, ** $p < .01$, *** $p < .001$

- ▶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인식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또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등으로 세부 영역을 나누어 가장 발전시키거나 도와주고 싶은 영역을 물었을 때,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자아개념/자존감 증진이 24.1%로 가장 높았고, 기질이 22.2%, 정서조절이 20.9%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 부모의 경우 기질 24.6%, 정서조절이 21.6%에 대한 도움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초등저학년 자녀 부모의 경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27.4%, 정서조절 20.2% 순서로 자녀 연령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정서 발달의 세부 영역이 달라 연령별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5]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 중 가장 발전시키거나 도와주고 싶은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 이해	정서 조절	자아 개념/ 자존감 증진	또래관계 기술 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22.2	11.0	15.1	20.9	24.1	5.7	1.0	100.0(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4.6	11.6	14.7	21.6	20.8	5.2	1.6	100.0(708)
초등저	19.7	10.5	15.5	20.2	27.4	6.3	0.4	100.0(704)
$\chi^2(df)$	16.240(6)*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25.1	9.2	11.7	24.7	21.9	6.4	1.0	100.0(890)
아버지	17.2	14.2	20.9	14.4	27.8	4.6	1.0	100.0(522)
$\chi^2(df)$	58.304(6)***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21.6	11.4	14.4	22.5	22.2	6.0	2.1	100.0(334)
400~600만원 미만	22.2	13.1	15.1	20.0	24.2	4.2	1.1	100.0(549)
600~800만원 미만	24.8	9.9	14.9	17.9	24.2	7.9	0.3	100.0(302)
800만원 이상	19.4	7.0	16.3	24.7	26.4	6.2	0.0	100.0(227)
$\chi^2(df)$	25.145(1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9.9	12.1	17.9	21.7	20.7	7.5	0.3	100.0(604)
경험 없음	23.9	10.3	13.0	20.3	26.6	4.5	1.5	100.0(808)
$\chi^2(df)$	24.403(6)***							
1+2순위	37.5	17.5	33.0	45.0	47.3	15.7	4.1	100.0(1,412)

* $p < .05$, *** $p < .001$.

다. 부모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 우려했던 경험과 보육·교육 기관을 통해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을 묻은 결과, 부모가 우려했던 경험이 65.5%임에 비해,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은 26.4%로 현저히 낮았음.

- 부모가 우려했던 경우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에 거주할 경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관으로부터 언급을 들은 경우는 남아인 경우,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 둘 다 미취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남.

[표 6]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우려 경험

단위: %(명)

구분	스스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된 경험		교육·보육기관으로부터 사회·정서발달 관련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		계(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65.5	34.5	26.4	73.6	100.0(1,412)
아동 성별					
남아	69.8	30.2	30.1	69.9	100.0(708)
여아	61.2	38.8	22.7	77.3	100.0(704)
$\chi^2(df)$	11.427(1)**		9.830(1)**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68.2	31.8	24.2	75.8	100.0(890)
아버지	60.9	39.1	30.3	69.7	100.0(522)
$\chi^2(df)$	7.723(1)**		6.321(1)*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71.3	28.7	28.7	71.3	100.0(334)
400~600만원 미만	65.9	34.1	26.0	74.0	100.0(549)
600~800만원 미만	63.9	36.1	25.5	74.5	100.0(302)
800만원 이상	58.1	41.9	25.1	74.9	100.0(227)
$\chi^2(df)$	10.714(3)*		1.299(3)		
거주지역					
대도시	62.0	38.0	25.8	74.2	100.0(682)
중소도시	68.7	31.3	27.1	72.9	100.0(623)
읍면지역	69.2	30.8	26.2	73.8	100.0(107)
$\chi^2(df)$	7.105(2)*		0.296(2)		
취·학업 상태					
맞벌이	66.7	33.3	29.0	71.0	100.0(675)
홀벌이	64.5	35.5	23.3	76.7	100.0(691)
둘 다 미취업	63.0	37.0	34.8	65.2	100.0(46)
$\chi^2(df)$	0.809(2)		7.495(2)*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79.0	21.0	43.7	56.3	100.0(604)
경험 없음	55.4	44.6	13.5	86.5	100.0(808)
$\chi^2(df)$	84.680(1)***		162.370(1)***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가 보육·교육 기관에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으로 걱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결과는 <표 6>과 같음.

- 부모가 걱정하는 내용으로는 기질적 까다로움(42.8%), 수줍음 및 대인상황 기피(40.2%)에 대한 걱정이 높았으며, 보육·교육 기관에서는 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35.0%)이나 수줍음 및 대인상황 기피(34.2%)에 대한 걱정이 높음.

[표 7]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기질적 까다로움	수줍음 대인상황 기피	자신감 없고 무기력	주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낮을 가리지 않음	정서 조절 어려움	타인정서 고려하지 못함	다른 아동 때리거나 괴롭힘	(수)
부모	42.8	40.2	18.7	13.1	17.1	26.8	31.1	5.0	(925)
기관	28.9	34.2	23.0	16.3	27.3	35.0	15.5	5.1	(374)

주: 부모가 우려한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내용과, 기관에서 우려한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내용을 기술함.

▶ 다음은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가 인식한 사회·정서 문제를 살펴본 결과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정서문제’, ‘형제/자매/가족 관계’, ‘또래관계의 어려움’, ‘불안/행동문제, 도덕성’ 등으로 나타났음.

• 언어발달 및 소통

-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 지연이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우려는 언어발달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두 돌 반 지나고 세 돌 전에 또래보다 언어가 너무 늦었어요. 언어가 느리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약간 느릴 수 있고요. 표현이 안 되서 몸으로 하니까 언어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유아2)

말이 늦으니까 원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친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유아6)

• 형제/자매/가족관계

- 동생이 새로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나, 형제자매 간 잘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상황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음.

조금 수줍어하는 성격이고, 기질적으로 약간 내성적인 아이라서 사교성을 기르도록 뭔가 해주고 싶었고,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영유아1)

본인만 사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태어난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엄마,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다른 아이보다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 사귀는데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것 같아요. (초등3)

• 또래관계

-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갈등을 회피하거나, 정서 조절이 어려운 점, 타인의 정서인식이 어려워 관계 맺기가 어렵거나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한 점이 보고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내거나 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또래들 속에 들어가고 싶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놀래? 같이 놀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유아6)

상대방이 자기한테 섭섭해 하거나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속상해한다거나 하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3)

- 불안, 행동문제, 도덕성 관련
 - 불안감이 높은 경우, 놀이 상황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친구들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 등과 같이 정서 행동문제,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걱정이 보고됨.

과격한 것 같아요. 약간 좀 형들한테도 까불고 약간 개구쟁이 스타일로 놀아요. 시비를 걸 정도는 아닌데 과격하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에서도 그래서 좀 형들이 화가 나게끔 약 올리고 약간 좀 짓궂게 노는 것 같아요. (초등3)

학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애가 친구 색종이를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색종이를 친구들이 나눠주는데 색종이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가 혹시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초등6)

라. 난점 수준별 부모의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 ▶ 영유아 대상 척도로 강점·난점을 측정된 결과로 정서, 행동, 과잉행동, 또래관계에서의 난점 총합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누고, 그 정도에 따라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을 조사한 결과, 기질(24.6%), 정서조절(21.6%), 자아개념/자존감(20.8%) 순으로 나타남.
 - 평균집단의 경우 기질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난점이 높아질수록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짐.

[표 8] 영유아 난점기준 그룹별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개념/ 자존감	또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24.6	11.6	14.7	21.6	20.8	5.2	1.6	100.0(708)
영유아 난점 검사								
평균 집단	25.8	10.3	13.1	19.3	25.3	5.6	0.6	100.0(466)
다소 높은 집단	21.9	9.6	18.4	21.9	21.9	2.6	3.5	100.0(114)
높은 집단	21.9	23.4	18.8	26.6	1.6	4.7	3.1	100.0(64)
매우 높은 집단	23.4	12.5	15.6	32.8	4.7	7.8	3.1	100.0(64)
$\chi^2(df)$				51.712(18)***				

*** p < .001

주: 정서+행동+과잉+또래관계 난점의 총합 기준, 0-12점: 평균집단, 13-15점: 다소 높은 집단, 16-18점: 높은 집단, 19-40: 매우 높은 집단

- ▶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척도로 강점·난점을 측정된 결과로 정서, 행동, 과잉행동, 또래관계에서의 난점 총합기준으로 3그룹으로 나누고,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가장 발전시켜주고 싶은 영역을 보았는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27.4%) 이 가장 높았고, 정서조절(20.2%), 기질(19.5%)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와 비교에 차이를 보임.

- 그룹별로는 평균집단의 경우 자아개념 증진이 28.9%, 기질이 20.4%로 높았던 반면, 경계선 그룹은 자아개념 증진(29.9%), 정서조절(22.1%) 순으로 높았고, 위험군의 경우 정서이해(20.8%), 기질(19.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난점의 정도에 따라 개선을 희망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

[표 9] 초등저 난점 기준 그룹별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개념/ 자존감 증진	도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19.7	10.5	15.5	20.2	27.4	6.3	0.4	100.0(704)
초등 난점 검사								
평균(일반)집단	20.4	9.5	14.7	20.2	28.9	6.2	0.2	100.0(550)
경계선	15.6	11.7	15.6	22.1	29.9	3.9	1.3	100.0(77)
위험군	19.5	16.9	20.8	18.2	14.3	9.1	1.3	100.0(77)
$\chi^2(df)$	16.994(12)							

주: 정서+행동+과잉+도래관계 난점의 총합 기준, 0-13점: 평균(일반)집단, 14-16점: 경계선, 17-40점: 위험군

▶ 자녀의 사회·정서 문제에 대한 인식 경로를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크게 1)부모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한 경우, 2)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해 들은 경우 3)병원 영유아 검진을 통해 알게 된 경우로 구분됨.

• 부모

- 부모가 자녀의 관찰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관련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기 아이니까 제일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런 아이구나 이제 알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거의 맞더라고요. (영유아1)

아이가 발 두 발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됐었어요. 말은 9개월에 엄마 아빠를 했고 말은 더디기는 했지만 좀 느리다 이 정도였지 이상하다 이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영유아3)

•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선생님

-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사회-정서발달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부모의 생각과 다소 다르더라도,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녀의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집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도래 아이들에 비해 느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유아4)

애기 때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때 계속 운다고 선생님이 한 번 좀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 가보라 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 불화를 많이 봐서 좀 불안한 것 같다고 했어요. (초등4)

- 병원 영유아검진
 - 0-72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검진을 통해, 연령별 검사영역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 발달 능력을 파악하고 체크해볼 수 있음.

영유아 검진을 할 때 설문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영유아5)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이 좀 늦다고 했어요. (영유아6)

4 정책 제언

가.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 발달지원 강화 방안

- ▶ **현재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사회·정서 발달학습 자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정서 발달을 하나의 학습대상으로 생각하고 학습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부모조사결과 전체의 90.2%가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88.1%가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서 발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1차적인 교육의 역할을 해야하며,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사회성발달, 정서이해, 정서조절 등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학습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회·정서발달학습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적 커리큘럼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 ▶ **사회·정서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지원 체계내에서 살펴본 결과 건강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등학교 내의 Wee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매우 낮아, 1차지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현실임.
- ▶ **연령과 지역에 격차 없는 유관기관 지원역할 확대**
 -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많은 사회·정서발달 행동 우려가 있을 경우 초기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유관기관 지원현황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초등저학년에 대해서는 사회·정서 발달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내실화 방안

▶ 사회·정서 발달 잠재적 위기군에 대한 대응 확대 (영유아, 초등)

- 사회·정서 발달은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부모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를 돌봐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 및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 정서행동 특성검사 후속조치 내실화 (초등)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위클래스 운영여부나 지방교육청의 지원예산 범위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부모 대상 검사 및 상담 확대

- 부모조사에서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한 발달 영역으로 전체의 57.1%가 사회·정서발달을 택하여, 사회·정서발달에 관심을 보였음.
- 그러나 사회·정서발달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부모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및 심리검사를 병행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또한, 부모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상담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상담가능시간의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

다. 부모 대상 사회·정서 발달 인식강화 및 홍보 방안

▶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2. 12)에서도 계획 중인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강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및 사회·정서발달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과 조기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적기에 치료가 필요함에도 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부족하여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모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 ▶ 부모가 가장 발전시키거나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으로 영유아의 경우 기질 및 정서조절,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및 정서조절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남.
 - 영유아, 초등저학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학습 체계 마련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질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기질별 양육 및 정서발달 학습방법 등을 고안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아개념을 보다 스스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22).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 김리진·조선화·채은영·홍서은(2024). 포스트코로나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문제와 적응문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7(3).
 - 황혜영·김수윤(2022). 포스트코로나시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우리의 과제: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7(2).
 -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 연구위원 jhkim@kicce.re.kr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특징¹⁾

최효미 연구위원

SUMMARY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을 전후하여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도 상승한 경향이 발견됨.
-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은 단시간 학원이 가장 주된 방식이며, 이용 과목은 학습보다는 예체능 관련 과목이 많음.
-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뒤처질까봐 걱정됨’,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함’, ‘선행학습 필요’ 등으로, 부모들은 보육·유아교육 기관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좀 더 늦은 연령으로 미뤄지면서,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지연된 영유아에 대한 집중 케어 프로그램 제공,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과 놀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및 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부모 교육 및 객관적 정보 제공 노력 등이 요구됨.

1)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2018~2023)를 활용 분석한 결과임. 기반이 되는 연구보고서는 2023년 기준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이나, 해마다 연구진과 과제명이 조금씩 수정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임.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연구 필요성

- ▶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최효미 외, 2023 : 151).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용으로(최효미 외, 2023 : 152), 영유아기 교육·보육비용은 주로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음²⁾.
 -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공존하는 상황이나,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이용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 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4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음(교육부, 2023. 6)
 - 「사교육 경감 대책」은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이 있긴 하나, 유아에 대한 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사교육 경감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 대상 정책의 주요 실천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음학기 운영,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 연계, 3~5세 교육과정 개정 등임.
 - 또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한다고 밝힘.
- ▶ 현재까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등학교령기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24년 9~10월 중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실시되었음(통계청 홈페이지³⁾).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표본이 약 13,300명(조사단위 : 개인)에 달함(통계청 홈페이지⁴⁾).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알 수 있는 대규모 통계 자료는 거의 없었음.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아동용 설문에 영유아의 사교육 활용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이전의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유아교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가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무상 보육교육의 실시와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상한률의 적용으로, 수익자 부담금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임.

3)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4)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2018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정도가 있음(이정원·도남희·최효미 외, 2023).

- 이 중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실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조사 설계 및 설문 개발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 자료로, 표본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유아기 사교육 실태의 변화를 고찰하기 적합함.
- 무엇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다양한 시간제 사교육 관련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 이전의 영유아기 사교육 활용 실태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고, 시의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결과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 본고는 2018년~2023년까지 총 6개 차수의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활용 실태를 분석함.

- 영유아기 아동별 시간제 사교육 활용 실태를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비중, 이용 시간, 이용 비용 순으로 고찰한 후, 서비스 종류별로 사교육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고찰함.
- 지난 6년 동안의 영유아 사교육 이용 실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사교육 이용 행태 특징을 추론해보고자 함.
- 이를 최근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가.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개관

▶ 시간제 사교육은 사교육 기관이나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은 제외됨.

-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은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등이 있음.
- 조사 항목은 연도별로 조금씩 구분 방식이 달랐으나, 설문이 통합된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마지막 차수인 2023년 분류 기준에 맞추어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 단, 중간에 설문이 추가된 경우(예: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등은 조사된 이후 차수 값만 제시함.

- ▶ 「KICCE 소비실태조사」시간제 사교육 조사 방식은 서비스별 이용 여부,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교과목 종류, 이용횟수, 이용 갯수, 만족도 등을 추가 질문한 경우가 있음.

 - 본고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 있고, 아동 연령별 이용 실태는 시간제 사교육을 총합한 형태로 수치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류별로 모두 조사된 항목 - 즉 이용여부, 이용 시간, 이용 비용-을 중심으로 보고함.
-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38.4%에서 2020년 24.7%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37.0%, 2022년 37.4%, 2023년 41.1%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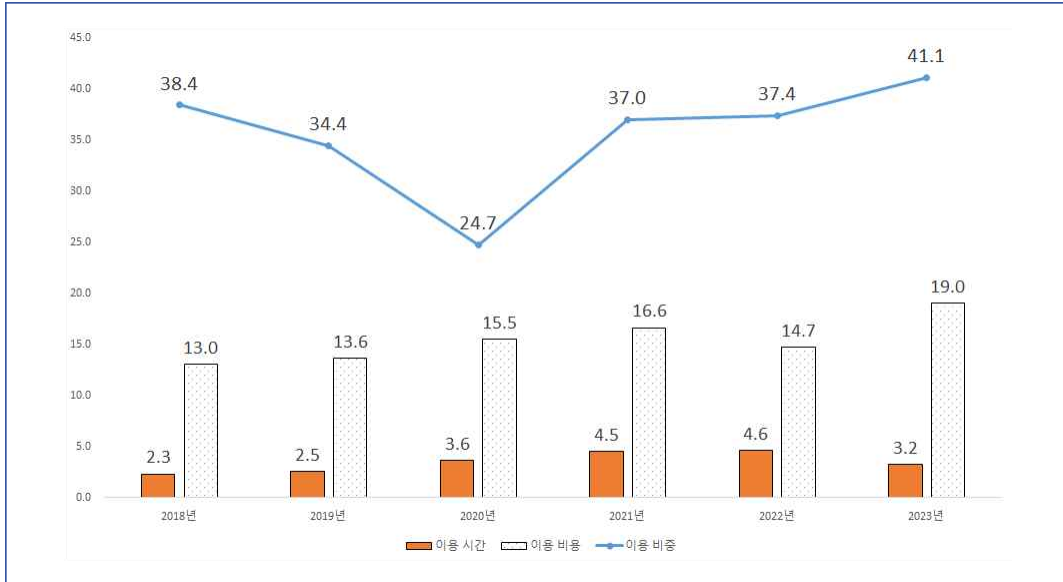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실시되던 시기로,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0년 이용하지 못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은 41.1%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18년에는 2.3시간이었는데, 이용 시간이 점차 길어져 2022년 4.6시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3.2시간으로 약간 감소함.

 - 2021년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18년에는 13만원이었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21년 16만6천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14만7천원에 그침. 그러나, 2023년 사교육 이용비용은 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은 주당 이용시간이 4.6시간으로 다른 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는데, 2022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14만7천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이는 2022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음을 반증함.
 - 2023년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2023년 시간제 사교육비의 상승은 1인당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함.
 - 2023년은 전년 대비 시간제 사교육은 이용시간은 감소하였음에도 이용비용은 크게 상승한 상태임. 이는 영유아 가구들이 좀 더 비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단가도 함께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영유아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2018~2023년)

단위: %, 시간, 만원



주 : 1)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이며, 이용비용은 월평균임.

2) 이용 비중은 전체 아동 대비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이며, 이용시간과 이용비중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산출한 값임.

나.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0세는 3.2%, 1세 18.3%, 2세 16.3%, 3세 23.9%, 4세 44.3%, 5세 64.3%, 6세 83.8%임.

-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모든 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임.
- 생활연령 기준 3세(보육연령 기준 2세)부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후로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함. 이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과 유사한 패턴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기관 이용 연령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함.

▶ 시계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모든 연령에서 이용 비중이 전년 대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전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1]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3년)

구분	단위: % (명)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38.4 (875)	34.4 (799)	24.7(584)	37.0 (888)	37.4 (894)	41.1 (996)
아동연령						
0세	2.4 (3)	1.3 (2)	0.0 (0)	0.0 (0)	0.6 (1)	3.2 (5)
1세	15.8 (42)	13.8 (41)	4.1 (13)	10.3 (32)	15.6 (50)	18.3 (58)
2세	19.7 (58)	14.9 (44)	4.5 (15)	17.0 (60)	12.2 (41)	16.3 (56)
3세	18.8 (67)	21.7 (73)	10.8 (36)	23.2 (85)	21.0 (83)	23.9 (91)
4세	41.8 (152)	32.7 (134)	27.7 (105)	42.7 (155)	44.1 (167)	44.3 (182)
5세	55.3 (223)	52.0 (211)	39.4 (167)	55.9 (226)	61.0 (251)	64.3 (257)
6세	71.9 (330)	69.8 (294)	59.1 (248)	75.3 (330)	72.5 (301)	83.8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임.

3) 2세 이하의 경우 이용률이 20% 이하로 낮은 편으로, 관측치가 매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0세 0.8시간, 1세 0.8시간, 2세 1시간, 3세 1.5시간, 4세 2.2시간, 5세 3.6시간, 6세 4.6시간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됨.

-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차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단,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긴 6세를 기준으로 주당 이용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9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6.3시간, 2022년 6.6시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4.6시간으로 2시간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급감하였다가, 2021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이용률 뿐 아니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도 전년에 비해 길어졌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이용시간이 크게 증가한 연령은 6세였으며, 5세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큰 편이었음.

[표 2]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2.3 (875)	2.5 (799)	3.6 (584)	4.5 (888)	4.6 (894)	3.2 (996)
아동연령						
0세	1.3 (3)	0.6 (2)	-	-	2.7 (1)	0.8 (5)
1세	1.0 (42)	1.0 (41)	2.2 (13)	0.9 (32)	0.8 (50)	0.8 (58)
2세	1.4 (58)	0.9 (44)	1.3 (15)	1.6 (60)	1.9 (41)	1.0 (56)
3세	1.6 (67)	1.1 (73)	1.5 (36)	2.9 (85)	1.9 (83)	1.5 (91)
4세	1.8 (152)	1.8 (134)	3.0 (105)	3.2 (155)	4.3 (167)	2.2 (182)
5세	2.5 (223)	2.6 (211)	3.1 (167)	4.7 (226)	4.6 (251)	3.6 (257)
6세	2.9 (330)	3.5 (294)	4.8 (248)	6.3 (330)	6.6 (301)	4.6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아동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0세 7만2천원, 1세 6만7천원, 2세 9만5천원, 3세 12만원, 4세 15만원, 5세 20만6천원, 6세 25만5천원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출되므로, 해당 비용이 모든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평균 이용비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는 바임.
-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도 이용률, 이용시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단, 0세의 경우에는 1세보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관측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0세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세라는 특성상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 영유아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3.0 (875)	13.6 (799)	15.5 (584)	16.6 (888)	14.7 (894)	19.0 (996)
아동연령						
0세	9.3 (3)	4.5 (2)	-	-	21.5 (1)	7.2 (5)
1세	6.5 (42)	5.4 (41)	10.1 (13)	7.5 (32)	6.7 (50)	6.7 (58)
2세	8.2 (58)	7.5 (44)	7.4 (15)	10.4 (60)	10.8 (41)	9.5 (56)
3세	10.7 (67)	8.4 (73)	13.0 (36)	13.5 (85)	15.1 (83)	12.0 (91)
4세	10.3 (152)	12.4 (134)	11.6 (105)	13.5 (155)	16.0 (167)	15.0 (182)
5세	14.3 (223)	12.9 (211)	14.1 (167)	17.1 (226)	19.6 (251)	20.6 (257)
6세	15.5 (330)	18.2 (294)	19.3 (248)	20.4 (330)	21.5 (305)	25.5 (347)

주: 1) 아동연령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35%, 300~399만원 이하 31.8%, 400~499만원 37.3%, 500~599만원 45.7%, 600만원 이상 45.6%이었음.
 - 2023년은 299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 이용 비중이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약간 높긴 하나, 관측치가 21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 단,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2023년에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2019년에도 299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 비용 비중이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약간 높았음.
 - 전반적으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모든 차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

[표 4]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38.4 (875)	34.4 (799)	24.7(584)	37.0 (888)	37.4 (894)	41.1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1.5 (96)	31.2 (53)	19.4 (24)	27.5 (39)	29.3 (31)	35.0 (21)
300~399만원 이하	32.4 (200)	25.7 (166)	20.2 (79)	35.4 (189)	32.9 (167)	31.8 (114)
400~499만원 이하	42.5 (217)	35.2 (218)	20.2 (143)	33.7 (212)	33.0 (187)	37.3 (238)
500~599만원 이하	41.8 (164)	37.7 (159)	28.0 (141)	36.9 (170)	40.3 (198)	45.7 (230)
600만원 이상	43.6 (196)	41.9 (203)	30.8 (197)	43.9 (278)	43.1 (311)	45.6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3.3시간, 300~399만원 이하 3시간, 400~499만원 2.9시간, 500~599만원 2.8시간, 600만원 이상 3.7시간이었음.
 -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일단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 이용 시간은 소득 수준과 큰 상관관을 보이지 않음.
 - 차수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2021년에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 시간이 5시간으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길었으며, 2021년에는 500~5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이용시간이 5.1시간으로 매우 길었고, 2022년에는 2021과 유사하게 500~5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이용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남.
 -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소득 구간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2020~2022년 사이 고소득 구간에서 이용 시간이 길게 나타난 현상은 아무래도 고소득 구간에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결과로 사료됨.

[표 5]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2.3 (875)	2.5 (799)	3.6 (584)	4.5 (888)	4.6 (894)	3.2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5 (96)	1.8 (53)	3.2 (24)	3.9 (39)	3.6 (31)	3.3 (21)
300~399만원 이하	2.1 (200)	2.2 (166)	3.0 (79)	4.3 (189)	3.6(167)	3.0 (114)
400~499만원 이하	2.3 (217)	2.2 (218)	2.3 (143)	3.5 (212)	4.3 (187)	2.9 (238)
500~599만원 이하	2.4 (164)	3.0 (159)	3.5 (141)	5.1 (170)	5.4 (198)	2.8 (230)
600만원 이상	2.8 (196)	2.7 (203)	5.0 (197)	5.1 (278)	5.0 (311)	3.7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3) 가구소득을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1차년도 2가구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인 경우 16만8천 원, 300~399만원 이하 16만1천원, 400~499만원 16만2천원, 500~599만원 18만3천원, 600만원 이상 22만원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499만원 이하인 가구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500~599만원 구간은 약간 많이 지출하고, 600만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도 좀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이용 금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우 크게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전반적으로 6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외하면, 모든 차수에서 모든 가구소득 구간별로 이용비용의 차이는 일괄되지 않으며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 단, 본고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으로, 이용률이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감안할 때, 해당 구간 내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미이용자는 0원 처리)을 산출하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것으로 사료됨.
- 즉, 영유아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점차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유사한 단가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표 6] 가구소득 구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3.0 (875)	13.6 (799)	15.5 (584)	16.6 (888)	14.7 (894)	19.0 (9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7 (96)	10.3 (53)	11.8 (24)	12.1 (39)	13.5 (31)	16.8 (21)
300~399만원 이하	10.7 (200)	11.1 (166)	15.3 (79)	14.5 (189)	14.8 (167)	16.1 (114)
400~499만원 이하	12.4 (217)	11.7 (218)	12.3 (143)	14.1 (212)	17.2 (187)	16.2 (238)
500~599만원 이하	13.9 (164)	16.2 (159)	15.1 (141)	18.9 (170)	18.0 (198)	18.3 (230)
600만원 이상	16.5 (196)	16.7 (203)	18.8 (197)	19.1 (278)	20.7 (311)	22.0 (393)

주: 1) 가구소득은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23.1%, 방문형 학습지 12.2%,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2.4%,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3.9%, 개인 및 그룹지도 1.2%, 문화센터 10.4%,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임.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은 당해연도 전체 응답 아동 중 해당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임.
- 시간제 사교육 유형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모든 차수에 단시간 학원 이용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에는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0.9%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시간 학원 등 집체 교육 형태의 사교육서비스 이용률이 급감함. 단, 2020년에는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이용률이 3.9%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1년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도 단시간 학원 이용률은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방문형 학습지는 2021년에 15.0%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22년 12.0%, 2023년 12.2%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임.
- 2021년부터 설문에 추가되어 조사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3.2%,

2022년 3.4%, 2023년 3.2%로, 코로나19를 전후하여 방문형 학습지가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10%내외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는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문화센터 이용자가 상당수 영아인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7]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비중 (2018~2023년)

구분	단위: %(명)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21.9 (524)	23.1 (559)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12.0 (286)	12.2 (295)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2.2 (52)	2.4 (5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3.3 (79)	3.9 (94)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26)	1.1 (25)	1.0 (23)	-	-	-
개인 및 그룹지도	3.2 (73)	2.5 (58)	1.5 (35)	1.4 (32)	1.9 (46)	1.2 (28)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7.6 (181)	10.4 (253)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3.2 (76)	3.4 (81)	3.2 (77)

주: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이용자 수(괄호)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자료: 1) 이정원·이재화·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3. <표 V-1-2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4.2시간,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0.8시간,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1.3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문화센터 1.2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8시간임.

- 단시간 학원의 경우 2020년 이용률은 감소했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은 5.6시간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2시간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 대부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2020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은 감소했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장시간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했음을 시사함.
-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이전에 비해 길어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음.

[표 8]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3.9	4.2
방문형학습지	0.6	0.5	0.6	0.6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0.7	0.8	0.8	0.7	0.8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3.6	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3	1.0	1.3	-	-	-
개인 및 그룹지도	1.9	1.7	2.1	2.8	2.2	2.2
문화센터	1.2	1.1	2.3	1.2	1.3	1.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1.9	1.9	1.8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6-187. <표 V-1-24>.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한편, 2023년 기준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학습 관련과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인 단시간 학원의 경우 학습 관련 과목 이용 시간이 2.8시간, 예체능 과목 이용 시간이 3.8시간으로, 예체능 관련 이용시간이 1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됨.

- 영유아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유형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예체능 과목을 이용하는 경우가 학습 관련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 관련 이용 시간과 예체능 관련 이용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예체능 관련 이용시간이 주당 1.8시간으로, 학습 관련 이용 시간 1.0시간에 비해 다소 긴 특징을 보임.

[표 9] 시간제 사교육 유형 및 과목별 주당 이용 시간 (2023년)

단위: 시간(명)

구분	학습관련		예체능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2.8	(155)	3.8	(508)
방문형 학습지	0.5	(30)	0.6	(26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24)	0.7	(38)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8)	1.3	(86)
개인 및 그룹지도	1.9	(18)	2.0	(12)
문화센터	0.9	(29)	1.2	(237)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0	(3)	1.8	(74)
EBS등 교육관련 방송시청	0.9	(8)	1.6	(21)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월평균 이용 비용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19만7천원, 방문형 학습지 9만3천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13만1천원,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11만3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20만5천원, 문화센터 6만원,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2만5천원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단시간 학원의 이용 비용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은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단시간 학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월평균 이용 비용은 2023년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비용은 전년에 비해서는 약 3만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단, 2023년의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은 2020년 14만8천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0】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3.4	14.2	17.0	17.6	18.0	19.7
방문형학습지	7.4	7.2	8.2	8.6	9.6	9.3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0.2	9.1	11.4	10.2	10.7	13.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6	8.3	9.2	10.7	1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8	8.1	8.6	-	-	-
개인 및 그룹지도	12.7	14.8	14.8	21.2	23.1	20.5
문화센터	5.2	4.8	5.5	5.5	5.6	6.0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	10.2	9.9	12.5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 ▶ 사교육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23년 기준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36.1%,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27.8%, '선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가 10.7%임.
- 반면, 자녀의 사회성 개발 등과 관련된 이유('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 양육공백('퇴근 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등의 사유는 10% 이하의 높지 않은 비중을 보임.
- 이는 부모들이 공보육·유아교육 서비스만으로는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활동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음.

- 그런데, 앞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는 학습 관련 활동보다 예체능 관련 시간제 사교육이 이용이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들은 현재 공보육·유아교육 서비스에 예체능 교육 활동이 적다고 느끼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11] 사교육 비용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5.7	7.5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31.1	36.2	35.6	36.1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3.6	6.5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27.4	30.5	27.8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2.6	2.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11.1	10.5	10.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2.5	2.5
아이가 원해서	9.5	7.7	7.7	4.3
기타	1.0	1.6	1.3	2.2
모름	2.4	0.0	-	-
계(수)	100.0 (220)	100.0 (291)	100.0 (315)	100.0 (294)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1. <표 V-1-3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4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을 전후하여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도 상승한 경향이 발견됨.

-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은 단시간 학원이 가장 주된 방식이며, 이용 과목은 학습보다는 예체능 관련 과목이 많음.
-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뒤처질까봐’ 걱정된다,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등으로, 부모들은 공보육·교육 기관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좀 더 늦은 연령으로 미뤄지면서 (최효미 외, 2023),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의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보육·유아교육 기관에서 부모들의 요구에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용하던 기관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공보육·유아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산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등에 대한 부모의 오해를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시기(2020년)의 영유아 코호트, 특히 2016년생~2018년생(당시 보육연령 기준 1세~3세)에 대해서는 공보육·유아교육 과정과 더불어 집중 케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학부모의 염려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16년생~2018년생(당시 보육연령 기준 1세~3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시작 시점이 밀리면서, 해당 연령일 때 해야 하는 교육 활동을 자녀가 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 깔려 있을 수 있음.
 - 이 시기 기관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여, 부모들의 과도한 오해와 염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기관 이용이 늦어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코호트의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집중 케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와 불필요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정규 보육·유아교육과정만으로도 아동이 발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동이 편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됨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부모들은 특히 예체능 관련 시간제 사교육을 놀이 활동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진정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3.6). 사교육 경감대책.
- 이정원·도남희·최효미·박은영·손창균(2023).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기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대행.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안내. https://kostat.go.kr/board.es?mid=b40302000000&bid=12078&tag=&act=view&list_no=432822&ref_bid= (인출일 : 2024. 11. 18)

[통계원자료]

-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2018년)~6차(2023)년 원자료.
-

최효미 연구위원 hmchoi@kicce.re.kr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SUMMARY

- 저출생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화된 공립병설유치원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아의 교육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효과적, 효율적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교육기관의 소규모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아교육 공급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울타리유치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유치원 간 연계, 통합 운영의 모델을 제시함.
- 소규모 유치원 개선의 주요 방안인 병설유치원간 통합 운영에 대해서 원장/교사/학부모는 집단별로 찬성 32.3~62.9%, 반대 28.4~51.0% 수준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을 통해 연령별 학급 편성과 또래 경험의 다양화를 기대하고 통학 거리 문제를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음.
-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합은 적정 통학거리, 유치원의 적정 규모, 학부모 동의,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통학차량 운행, 방학 중 급식 제공, 통합에 따른 적응 지원, 적정 규모화를 통한 단설 방식 운영 도입 등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¹⁾

-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유아 인구의 감소는 유치원 재원 유아 수의 급감 및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유치원의 소규모화, 운영방식의 재구조화, 더 나아가서는 폐원 방식의 간소화 등 여러 측면에서 유아교육 기관 자체의 형태, 운영, 존속 여부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유치원 원아 수 급감 상황에서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화된 공립병설유치원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아의 교육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효과적, 효율적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 정부는 2023년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 인구 급감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소규모화 등으로 인한 유아교육 공급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시함.
 - 계획에 의하면, 향후 유치원 설립 제도의 개선,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 운영 곤란 유치원의 폐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음.
- ▶ 올해 2024년도는 출생아 수가 처음 20만 명대로 감소한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한 해로, 유치원은 인구 절벽의 최전선에 위치한 교육기관임.
 - 연도별 출생아수를 보면 2016년 40.6만명이었으나 2018년 32.7만명, 2019년 30.3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7.2만명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26만명,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출생아 수 감소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속도라면 앞으로 3-4년 후엔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 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2018년도 대비 2022년도에 18.2%가 감소한 것으로 산출되나, 향후 5년간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7년 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73.9만명으로 예측되며, 이는 2022년도 대비 약 32% 감소한 수준임(관계부처 합동, 2023).
- ▶ 유아 인구와 유치원 재원 유아 수의 감소는 결국 유치원의 소규모화 등 유아교육 공급구조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는 유아배치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됨.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기본과제인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김은설, 강은진, 윤지연 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원고임.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전체 유치원 수 및 인가학급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유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사립유치원은 연평균 약 200개원씩 폐원하고 있고 공립병설유치원은 1학급 규모의 기관으로 변화하여 초소규모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체 국·공립유치원 중 1학급 소규모 유치원의 비중은 49.6%임 (교육통계서비스).
 -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유아배치계획 등 유치원 설립 관련 정책에서 지역 유아 인구 변화에 따라 소규모화될 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 교육부(관련자 면담, 2024. 3)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공립 유치원 모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는 출생아 수 급감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충원을 하락,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기존 국·공립 기관 형태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음.
- 전체 국·공립 중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와 공동 운영으로 인해 저녁 돌봄이나 방학 중 통학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원감배치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 유아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운영 개선 계획에서 유아 수 변화를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지고 있으며, 농어촌 등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임에도 교육적 환경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사업(“한울타리유치원 사업”) 현황

가. 사업 현황

- ▶ 정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운영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은 복수의 소규모 유치원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통학차량 운행 등 소규모 유치원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규모가 큰 유치원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운영 개선 사업임.
 - 소규모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편성이 불가능하고 전용 통학차량 운행이 없어 방학 중 유치원 원아가 이용할 수 없으며 돌봄 여건이 부족함.
 - 소규모 병설 1인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을 통해 단설유치원과 같은 운영 측면의 여러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 2024년 3월 기준 한올타리유치원의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 6개 시도,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통합형이나 거점형 한올타리를 선택하였으나 충남지역에서는 공동연계형으로 4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를 보임.
- 통합형은 복수의 유치원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그 중 중심이 되는 1개 유치원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유치원으로 전환, 운영되는 한올타리 유형으로,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단설 또는 중규모(3학급) 이상 병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방식임.
- 거점형은 하나로 통합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중심유치원에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기관 간 협력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유치원들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공동연계형은 중심유치원 없이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실내외 공간을 인근 유치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임.

[표 1] 2024년 3월 현재 한올타리유치원 운영 현황

시·도	교육지원청	한올타리 유형	한올타리 유치원 구성
대구	서부	통합형	중심 1 참여 3
		통합형	중심 1 참여 1
대전	동부	거점형	중심 1 참여 1
		거점형	중심 1 참여 1
	서부	거점형	중심 1 참여 1
		거점형	중심 1 참여 1
충남	논산계룡	통합형	중심 1 참여 1
	천안	통합형	중심 1 참여 1
	천안	공동연계형	참여 3
	공주	공동연계형	참여 4
	아산	공동연계형	참여 3
	서산	공동연계형	참여 2
전북	군산	거점형	중심 1 참여 3
	익산	거점형	중심 1 참여 2
	정읍	거점형	중심 1 참여 2
	김제	거점형	중심 1 참여 2
전남	목포	거점형	중심 1, 참여 2
경북	김천	통합형	중심 1, 참여 2
	구미	통합형	중심 1, 참여 2
총 6개 시도	14개 지역	15개 한올타리	45개 유치원

자료: 교육부(2024). 한올타리사업 추진 현황. 내부자료.

나. 사업 내용 및 현장 의견

1) 사업을 통한 상호 협력 내용

- ▶ 공동연계형으로 운영하는 충남의 경우,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여 교육 과정 설명회 공동 개최, 특색 교육활동, 현장체험행사 공동 진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 편성 상호 지원, 통합차량 운영,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공동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함.
- ▶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대구시는 소규모 유치원이 갖고 있는 약점들, 즉 연령별 학급 편성이 되지 않고 혼합연령 반 구성을 해야 하는 점, 방학 중 점심제공이 어려운 점, 통학버스 이용이 안 되는 점, 사립에 비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이 해소되는 측면을 장점으로 꼽았음.
- ▶ 대전의 경우는 거점유치원 형태 운영을 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협력으로 유치원 간 유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거점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동 방과후 과정을 위해 거점유치원으로 유아를 이동시켜 모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거점유치원으로 방문하여 서로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임.

2) 면담을 통해 알아본 현장 의견

- ▶ (전국 시도교육청의 한울타리유치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담을 진행한 결과) 담당자들은 한울타리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비용지원으로 체험활동 횟수가 증가하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연령별 학급 편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함.
- ▶ 저녁 돌봄과 관련해서 통합을 통해 이용 아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상시적으로 19시까지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용 만족도 또한 향상됨.
 - 교사 또한 1학급 유치원에서 혼자 담당하던 모든 일들을 3~4명으로 집단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업무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한 인센티브까지 주어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함.
- ▶ 담당자들이 밝히는 애로사항으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재구조화해야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 사업 일정으로 공사가 늦어져 개원일자를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 등의 의견이 있었고, 사업 참여 운영 계획을 하는 데 있어 교육청 내에서 사업부서(i.e. 유아교육과)와 시설담당부서(i.e. 학교운영과) 간 의견 일치가 어려워 유치원 사업부서 계획의 실현에 적극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나타남.
- ▶ 장학사 면담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대하여 개별 모(母)초등학교나 지역사회가 반대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아를 위한 진정한 질 좋은 유아교육의 제

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통폐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지함.

- ▶ 시도 장학사들의 전반적 의견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유치원 공립 확대 정책의 결과로 급격히 확충된 병설유치원이 출생아 수 지속 감소로 인해 원아모집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맞아 통폐합의 방향으로 관련 부서 모두가 협력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 의견을 모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정비는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3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의 이상적 모형

-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 학급 수 구성에 대한 원장/원감의 의견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전체적인 적정 학급 수에 대한 의견은 평균 2.5학급으로 나타났고, 3학급이 43.9%, 1학급이 24.1%, 2학급이 21.6%로 높게 나타남.

[표 2]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 학급 수에 대한 원장/원감의 의견

단위: %, 학급, (명)

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이상	평균 (학급)	계(수)
전체	24.1	21.6	43.9	3.6	1.0	5.0	0.8	2.5	100.0 (522)
지역 규모									
대도시	13.8	27.6	39.7	8.6	1.7	8.6	0.0	2.8	100.0 (58)
중소도시	21.9	18.0	46.1	3.9	0.8	7.0	2.3	2.8	100.0 (128)
읍면지역	26.8	22.0	43.8	2.7	0.9	3.6	0.3	2.4	100.0 (336)
$\chi^2(df)$				20.737(12)					

▶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운영

-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합과 휴·폐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모든 응답 집단에서 교육환경 조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장/원감과 교사는 등·하원 조건이었으며, 학부모는 학부모의 의사를 선택함.

[표 3] 유치원 통합 또는 휴·폐원 결정 시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학부모 의사	등하원 조건	교육환경 조성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지역 내 구심점 기능	기타	계(수)
원장/원감	21.3	29.3	38.9	3.4	6.9	0.2	100.0 (522)
교사	16.7	33.0	33.1	2.4	11.0	3.9	100.0 (798)
부모	29.9	23.5	40.0	2.8	3.0	0.8	100.0 (528)

- 유치원 통합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의견차이가 나타남. 원장/원감은 매우 찬성과 찬성이 62.9%로 과반 이상이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고, 교사는 반대와 매우 반대 의견이 51.0%로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모 또한 반대와 매우 반대가 44.7%임.

[표 4] 유치원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수)
원장/원감	34.5	28.4	8.8	16.3	12.1	100.0 (522)
교사	14.2	21.1	13.8	17.7	33.3	100.0 (798)
부모	8.1	24.2	22.9	23.7	21.0	100.0 (528)

- 유치원 통합 운영의 기대되는 장점으로 세 집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연령별 학급 편성과 또래경험임. 그 중 원장과 교사는 연령별 학급 편성을 각각 42.9%, 25.3%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에 비해 부모는 또래경험을 43.9%로 가장 많이 선택함.

[표 5] 유치원 통합 운영의 기대되는 장점

단위: %(명)

구분	연령별 학급 편성	또래 경험	체험 활동	방과후 활동	저녁 돌봄	방학중 급식	차량 운영	원아 모집	재정 효율성	업무 부담 완화	기타	계(수)
원장/원감	42.9	25.1	7.7	1.3	0.4	0.2	1.9	9.6	8.2	2.1	0.6	100.0(522)
교사	25.3	24.8	5.1	0.5	0.9	2.4	5.5	12.5	3.8	11.0	8.1	100.0(798)
부모	24.4	43.9	11.6	1.3	1.1	0.8	4.0	5.3	1.9	1.5	4.2	100.0(528)

- 유치원 통합 운영의 단점으로 세 집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등하원 어려움이었고,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음.
-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원장/원감은 초등학교 통폐합(25.1%) 가능성, 교사와 부모는 소규모 유치원 고유 장점의 소실을 각각 21.3%, 26.5%로 선택함.

[표 6] 유치원 통합 운영의 예상되는 단점

단위: %(명)

구분	고유 장점 소실	초등 학교 통폐합	등하원 어려움	유아 적응	물리적 환경 정비	업무 부담	비용	기타	계(수)
원장/원감	10.3	25.1	49.8	5.7	5.7	1.9	0.8	0.6	100.0(522)
교사	21.3	8.3	48.1	7.9	6.1	4.9	0.9	2.5	100.0(798)
부모	26.5	9.8	43.2	13.4	3.8	1.3	0.6	1.3	100.0(528)

- 통폐합을 고려할 때, 통학차량 기준 적정 등원 거리에 대해 원장의 경우 편도 20분 이내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43.1%로 가장 높았고, 10분 이내가 36.2%임. 응답 대상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읍면지역이 도시보다는 통학 가능 거리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었음.

[표 7] 적정 등원 거리(편도, 통학차량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40분 이내	50분이 내	1시간 이내	계(수)
원장	36.2	43.1	19.3	1.0	-	0.4	100.0(522)
지역 규모							
대도시	50.0	39.7	8.6	0.0	-	1.7	100.0(58)
중소도시	56.3	35.2	7.8	0.8	-	0.0	100.0(128)
읍면지역	26.2	46.7	25.6	1.2	-	0.3	100.0(336)
$\chi^2(df)$			52.712***(8)				
교사	25.2	42.9	28.6	2.1	0.8	0.5	100.0(798)
지역 규모							
대도시	37.3	52.2	10.4	0.0	0.0	0.0	100.0(67)
중소도시	44.3	38.3	15.4	1.0	1.0	0.0	100.0(201)
읍면지역	15.5	43.3	36.9	2.7	0.8	0.8	100.0(510)
$\chi^2(df)$			93.118***(10)				
학부모	46.8	35.2	16.1	1.7	-	0.2	100.0(528)
지역 유형							
도시	71.1	19.8	8.6	0.5	-	0.0	100.0(187)
농촌	33.3	43.7	20.4	2.4	-	0.3	100.0(339)
$\chi^2(df)$			69.606***(4)				

*** $p < .001$.

▶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 개선 방안 관련

-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음. 원장의 경우, 2~4개원을 통합하여 3~5학급 병설유치원 운영 36.0%로 가장 높음.

[표 8]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별 선호도

단위: %(명)

구분	2~4개원 통합 후 병설 유치원 구성	5~7개원 통합 후 단설 유치원 설립	인근유치원 간 프로그램 협력 운영	거점유치원 중심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계(수)
원장 전체	36.0	18.6	29.3	14.4	1.7	100.0(522)
지역 규모						
대도시	31.0	34.5	12.1	19.0	3.4	100.0(58)
중소도시	41.4	28.1	18.0	11.7	0.8	100.0(128)

구분	2~4개원 통합 후 병설 유치원 구성	5~7개원 통합 후 단설 유치원 설립	인근유치원 간 프로그램 협력 운영	거점유치원 중심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계(수)
읍면지역	34.8	12.2	36.6	14.6	1.8	100.0(336)
$\chi^2(df)$			43.849*** (8)			
교사 전체	17.7	9.6	40.0	15.8	17.0	100.0(798)
지역 규모						
대도시	20.9	19.4	31.3	10.4	17.9	100.0(67)
중소도시	18.4	11.4	35.3	19.4	15.5	100.0(201)
읍면지역	17.6	7.8	43.5	14.9	16.0	100.0(510)
$\chi^2(df)$			19.108* (10)			
학부모 전체	22.2	5.3	52.8	18.2	1.5	100.0(528)
지역 규모						
대도시	27.8	7.4	44.4	20.4	0.0	100.0(54)
중소도시	20.3	6.8	48.1	20.3	4.5	100.0(133)
읍면지역	22.1	4.4	56.3	16.5	0.6	100.0(339)
$\chi^2(df)$			16.050* (8)			

* $p < .05$ *** $p < .001$.

- 교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행정인력 26.8%, 단독 운영 차량 21.4%, 인근 유치원 협력 지원 13.2%순으로 나타남.

[표 9]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항(교사)

단위: %(명)

구분	단독 운영 차량	보조 교사	행정 인력	방과후 전담 인력	저녁 돌봄 인력	노후 시설 개선	체험 활동 등 지원	특성화 프로 그램	인근 유치원 협력 지원	기타	계(수)
전체	21.4	3.9	26.8	7.9	6.5	4.4	4.6	6.9	13.2	4.4	100.0(798)
지역 규모											
대도시	16.4	1.5	34.3	1.5	6.0	9.0	7.5	11.9	9.0	3.0	100.0(67)
중소도시	25.4	3.0	25.9	10.9	6.5	5.5	4.0	5.5	10.0	3.5	100.0(201)
읍면지역	20.8	4.5	25.9	7.6	6.5	3.5	4.7	6.9	15.1	4.5	100.0(510)
$\chi^2(df)$											25.017(18)

- 소규모 유치원이 인근 타 유치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원활하게 협력 및 연계할 수 있는 부분(1+2순위)은 행사 공동 진행(68.9%)으로 나타났고,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공동 운영 26.3%, 교육과정 계획 협력 24.4%, 급식 도시락 공동 운영 22.9%순으로 나타남.

[표 10] 인근 유치원 간 협력 운영 시 연계 가능 사항(교사)

단위: %(명)

구분	교육 과정 계획	행사 공동 진행	교사 상호 자율 장학	학기중 방과후	방학중 방과후	저녁 돌봄	급식 도시락	비품 구입	부모 교육 등	통학 차량	놀이터 등 공간 이용	기타	계(수)
1순위	15.0	45.2	2.0	2.0	12.8	3.0	8.5	0.0	2.4	6.9	0.1	2.0	100.0(798)
2순위	9.4	23.7	7.0	3.8	13.5	6.5	14.4	0.1	7.6	12.3	1.3	0.4	100.0(798)
1+2순위	24.4	68.9	9.0	5.8	26.3	9.5	22.9	0.1	10.0	19.2	1.4	2.4	100.0(798)

4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가. 소규모 유치원 간 통합

1) 필요성

▶ 유치원의 소규모화로 인한 유치원 교육의 어려움

- 유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등에서 10명 혹은 5명 미만의 초소규모 유치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합연령으로 1개 학급을 구성하여 교사 1명이 전 연령을 담당함으로써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유치원교육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적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개선의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통학거리의 문제를 최대한 적절하게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유치원 운영 개선 사업 “한울타리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소규모유치원의 통합적, 연합적 운영의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서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 교사의 전문성 강화, 돌봄 기능의 확대 등 유치원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농어촌의 소규모 공립초등병설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통합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원장/원감은 과반이 찬성하고 있으나 교사나 부모집단은 찬성보다는 반대의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교사의 경우 경력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이사를 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견을 더 정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유치원 통폐합 운영의 장점으로는 연령별 학급 편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연령별 다양한 또래 경험 기회 등이 선택되었고, 우려되는 점으로는 거리가 멀어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하원의 어려움, 소규모 유치원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고유한 장점의 소실 등이 꼽혔으므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통합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2) 소규모 유치원 통합 시 고려 사항

▶ 통학의 적정 거리

-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때 주거지로부터 20분 이내 거리로 통학이 가능할 때 통합이 가능함.
- 20분이라는 등하원 시간 요건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나 부모, 원장의 최대 다수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거리 기준임.
- 통합이 가능한 유치원의 조건으로 통학차량으로 편도 2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 통합 대상 유치원의 규모

- 통합 운영을 고려할 때 1~2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통합했을 때 연령별 1개 학급 이상, 즉 최소 3개 학급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유아 인원이 있어야 통합, 증설된 유치원으로 운영이 가능함.
- 농어촌 유치원의 실태에 대한 논의(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2024. 9)에서, 현지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5명 이하 최소 유아 수를 가진 유치원들의 경우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을 통해 통합 운영을 추진하더라도 거의 효과가 없고 3개 이상 더 많은 수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 또한 지리적 여건 상 불가능하므로, 과도하게 재원아가 적은 유치원은 통합에 적절하지 않다고 함.
- 결과적으로, 2~3개 유치원의 통합을 통해 3개 이상 연령별 학급 구성이 원활할 수 있는 규모일 때 통합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의 경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 통합을 통해 적정 수준 유치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학부모 동의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통합 운영에 대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동의가 필요함.
- 아동을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부모의 경우 이들이 가진 우려점인 거리상의 문제 해결 방안, 교육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별적 요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통합운영의 중심이 되어 유아들이 모이게 되는 중심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또래 규모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장점 등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 받는 절차가 필요함.

▶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일부 지역의 경우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여 유치원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여 통합을 위한 행정적 시행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음.
- 통합적 운영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통합에 대한 교육청 단위 혹은 학교 단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함에 대해 40억 원의 지원이 학교당 주어지고 있음(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2024.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은 초등학교 정원의 1/4 수준으로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용하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초등학교 대비 1/4로 책정하여 10억 원 규모로 통합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나.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 ▶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단독 독립 통학차량 운행

-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이 아니라 통합운영을 통해 유치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비교적 장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유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단독의 독립 통학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것임.
- 초등학교 학생보다 더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돌봄 시간을 더 길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유아의 통학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유치원 독립 통학차량 제공이 필요함.

▶ 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제공

- 통합을 통해 유치원의 규모가 커지고 한편으로는 유치원 교육여건 제고를 위해 단설유치원과 같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면, 방학 중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시간의 이용을 위해 유치원 자체 급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급식실을 별도로 조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방학 중만이라도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외부 급식의 단체 매식 방안 등을 통해 급식 제공이 원활해져야 할 것임.
- 현재 소규모 유치원에서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도시락 지참을 요구함으로써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통합 운영 시 유치원 적응을 위한 지원

- 유치원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웃 유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유아를 위해 전원에 따른 적응 지원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연령이 3세, 4세로 어릴수록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릴수록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통합운영으로 중심유치원이 되어 유아들이 이동해온 유치원에서는 3세 유아에 대해서는 기존 유치원의 교사나 지원 인력이 최소한 일정기간 근무하며 유아의 적응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병설유치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단설 방식 운영

- ▶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운영을 통해 학급이 적정 수가 되도록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때 단일한 독립유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학급 구성

-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3, 4, 5세 각 연령별 학급을 최소 1개 이상씩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함.
- 이를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에 따른 환경 재구성을 교육청에서 계획하여 초등학교를 지원해야 함.

▶ 원감직의 신설

- 증설된 4학급 이상(특수 1학급 포함) 유치원에는 원감직을 두어 유치원 운영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병설유치원의 고질적 어려움 중 하나는 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이 겸임함으로써 학교의 병설로서만 운영에 관여하여, 독립기관으로서 유치원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종종 직면한다는 점임.
- 유치원의 운영을 일정 정도 책임지고 초등학교 경영과 동일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원감 지위가 병설유치원에 부여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영

- 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방안을 고려해야 함. 단설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유아들의 통학 거리를 검토하여 통합된 유치원의 원활한 등하원을 위해서는 유치원 전용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함.

5 맺음말: 유보통합의 고려

- ▶ 정부는 2023년부터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2027년 이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개선 방안은 2027년 이전까지 한시적 방안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출생과 영유아 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유아교육기관(유보통합 기관) 정원 충족률의 미흡은 변함없이 유지될 현상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미래 상황임.
- ▶ 가까운 장래에 맞이하게 될 유보통합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앞서 제안한 유치원 설립, 운영 개선 방안들이 현실화될 때는 통합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통합기관의 설립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유아배치계획의 수립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기관의 유형이 구분되는 방식에 따라 설립 계획이 고려해야할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아 및 유아 모든 연령에 대한 기관 선호, 취원 시기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정확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기관 간 협력의 측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통학버스 노선의 공유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특히 유치원 통폐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치원 접근성의 하락 문제는 어린이집과의 밀접한 협력과 상호 지원 속에서 유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상호간 과도한 원아 경쟁의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질적으로 상향평준화되는 것이 선도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을 수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인근 어린이집과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유치원 교사가 82.5%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 내 소규모 기관 간 운영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보상호간 이해와 상생을 강조하고 인센티브가 함께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으로는, 유보통합 모델의 현장 적용 이후에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 운영, 협력적 상호 지원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지속 개발하고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적 운영의 성과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우선 필요 요건이 될 것임.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 교육부(2024). 한울타리유치원사업 운영 현황. 내부자료.
 - 김은설 · 강은진 · 윤지연(2024).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eskim@kicce.re.kr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과제¹⁾

박은정 부연구위원

SUMMARY

- 본고는 해외사례 및 아동 대상 현금급여²⁾ 개편 관련 전문가 및 육아가구의 의견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대다수의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16~20세 미만(연장 20~2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채택된 지급액 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5개 국가에서만 실시하는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는 2~3세 미만까지 한정적 기간에만 지급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현금급여 제도 중 아동수당 제도의 중요성과 개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는 전문가와 육아가구에서 모두 낮았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육아가구의 양육비 부담률은 증가함.
- 아동 대상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현금급여 체계 및 지속가능한 현금급여 제도 틀 구축이 필요함.

1) 본고는 「박은정·유해미·조혜주·김연진·서효진·정은희(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2) 본고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로 제한함.

1 서론

가.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관련 쟁점

- ▶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월 10만원 지급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급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2019년 만 7세 미만, 2021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
 -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가구소득 100분의 90이하에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 4월부터 아동수당 소득수준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 아동수당의 개편 쟁점은 크게 지급연령 확대, 지급액 상향, 차등 지원 방식 도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동수당은 도입 이후 지급연령이 다소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12세)도 포괄하지 않아,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면 대상 포괄성이 매우 낮은 편임.
 - 아동수당 도입 후 지급수준의 적절성 검토나 지급액 조정방식 도입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못함.
 -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아동(가족)수당의 차등 지급이나 부가급여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내에 지급수준 상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부가급여 방식의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에 집단의 지원 욕구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가정양육수당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아동가구 대상 수당 제도이며,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미이용과 가정양육을 전제로 하는 제도임에도 취학전(만 84개월 미만) 연령까지 이례적으로 크게 확대됨.
 - 2013년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면서 가정양육 아동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리로 확대
- ▶ 가정양육수당의 개편 관련 논의는 수당의 축소 및 폐지, 급여액 조정, 취약 아동 지원으로 구분됨.
 - 가정양육수당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만 3세 미만 영아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동수당 확대와 부모급여 도입으로 축소 및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음(고은혜·이일주, 2015; 송다영·박은정, 2019; 양미선 외, 2022; 유해미 외, 2011).
 - 또한 만 2세부터는 대다수가 기관을 이용하고 만 3세부터 유초 연계 교육이 강조되는 공통 누리과정의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취학 직전(만 86개월 미만)까지 보편적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전체 육아정책의 제도적 맥락과 정합성을 갖지 못함.
 - 다만,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인프라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대상 양육수당(농어촌 및 장애 아동양육수당) 지급 유지의 필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음(박은정 외, 2022; 양미선 외, 2022).

- ▶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되기 시작하여,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 규명과 다른 제도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가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별개로 기존 영아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되어 제도적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 부모급여는 기관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가 혼합 지급되어, 행정적 비용 및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효과성을 지적받는 부분이 있음.

나. 통합적 관점에서의 개편 논의 필요성

- ▶ 현금급여는 개별 제도별 개편이 아닌 현금급여 체계와 시간, 서비스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 아동수당 확대는 가정양육수당의 축소와 폐지 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자녀세액공제 지급연령과 연동되어 있음.
 -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연령이 만 2세부터로 조정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 개편과도 연동됨. 또한 부모급여 초기 지급연령과 맞물리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과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개별 현금급여가 전체 육아정책 맥락에서 제도적 정합성과 제도의 목적 부합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왔음.
- ▶ 현금급여 제도 설계에서 보편주의의 다차원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현금급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 보편적 수당 제도라도 보편적인 대상 중 욕구가 큰 집단에게 추가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여 보편주의 내 표적화(targeting)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두에게 동일 적용하여 단일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적 수당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금급여의 지급수준에 대한 타당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지급액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지 못하였음.
- ▶ 이에 본고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 설계와 아동 대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관련 전문가 및 수요자 의견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OECD 주요국 중 GDP 대비 공공가족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이며 일정 수준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지급기준 및 수준을 검토함.
 - 2024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 결과와 육아가구 대상 FGI³⁾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수요자 의견을 검토함.

2 해외 OECD 주요국 아동(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

- ▶ 해외 주요국 아동(가족)수당의 기본 지급 연령은 16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임.
 -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20~25세 미만까지 연장 지급함.
 - 부모의 돌봄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까지 아동수당 지급
- ▶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아동(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평균 임금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OECD family database) 정도임.
 - 가장 많은 국가에서 출생순위 및 자녀수에 따른 아동(가족)수당 차등지급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한부모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 보수주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 지급수준이 높으며, 가장 높은 지급수준을 가진 국가인 폴란드는 전일제 근로자(양부모 가구)의 평균 임금의 11% 수준을 아동(가족)수당으로 지급

[표 1] OECD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연령

국가	기본 연령 (세, 미만)	연장 연령 (세, 미만)	차등지급 기준				지급 수준 (%)
			소득	출생순위	자녀수	연령	
스웨덴	16	20			○		6.0
영국	17	-		○		○	5.5
호주	18	-	○			○	5.3
핀란드	18	-				○	3.9
헝가리	18	25					9.2
노르웨이	20	-	○		○	○	4.0
덴마크	19	25					8.6
이스라엘	21	25				○	
독일	19	25			○	○	10.5
폴란드	18	24			○	○	11.0
벨기에 (플란데런)	17	23			○	○	7.9
오스트리아	16	20	○	○			4.6
프랑스	16	20	○	○	○	○	2.6
벨기에(왈로니)	18	-		○	○		2.7

자료: 1) 유럽연합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024. 7. 1 인출)
 2)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공식 홈페이지: 스웨덴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폴란드 <https://www.gov.pl/web/rodzina/co-robimy-wsparcie-dla-rodzin-z-dziecmi> (2024. 7. 1. 인출); 영국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1. 인출); 벨기에 플란데런 <https://www.groeipakket.be> (2024. 7. 1. 인출), 왈로니 <https://aviqid.aviq.be> (2024. 7. 1. 인출),
 3) 독일: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
 4)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3) 자녀연령(영아, 유아, 초등, 중등 자녀) 및 가구특성(자녀수, 저소득)을 기준으로 총 8개 집단(집단별 참여자 4명 내외)을 구성하여 실시함.

- ▶ 대다수의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국가가 총 6개 국가(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왈로니, 오스트리아, 호주)로 가장 많음.
 - 이외에 국가들도 정부 및 국회 예산, GDP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나 스웨덴, 독일 등은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스웨덴은 아동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하며, 독일의 아동 생계비를 산출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조정함.
- ▶ 양육수당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5개국만 실시하며, 가정 내 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은 만 2~3세까지 한정적 기간에만 지급함.
 - 가정양육수당은 최대 7개월~1년 이내로 단기간 지급하며, 근로시간 및 서비스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둬.

3 전문가 및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

가. 현금급여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실시
 - 1차 조사에서 53명 중 응답 완료 수 43명(응답률 81%), 2차 조사에서 1차 응답자 43명 중 응답 완료 수 40명(응답률 93%)

1) 제도 목적 및 지원 수준 적절성 관련 의견

- ▶ 현금급여 제도(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목적 관련 전문가 응답에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높게 나타남.
 - 아동수당 목적으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88.4%)' 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62.8%)'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83.7%)',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69.8%)'이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함.
 - 목적별로 제도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의 중요도가 6.33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점 이상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아동수당(5.12점)과 부모급여(5.42점)로 나타남.
 - 그 이유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제도는 전체 아동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보편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부모급여는 지급수준이 높아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및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의견이 있었음.

[표 2] 현금급여 제도의 고유 목적에 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기타
아동수당	88.4(38)	62.8(27)	20.9(9)	4.7(2)	20.9(9)	4.7(2)	0.0(0)
부모급여	16.3(7)	83.7(36)	55.8(24)	32.6(14)	9.3(4)	18.6(8)	2.3(1)
가정양육수당	4.7(2)	41.9(18)	16.3(7)	69.8(30)	2.3(1)	34.9(15)	7.0(3)

주: 복수응답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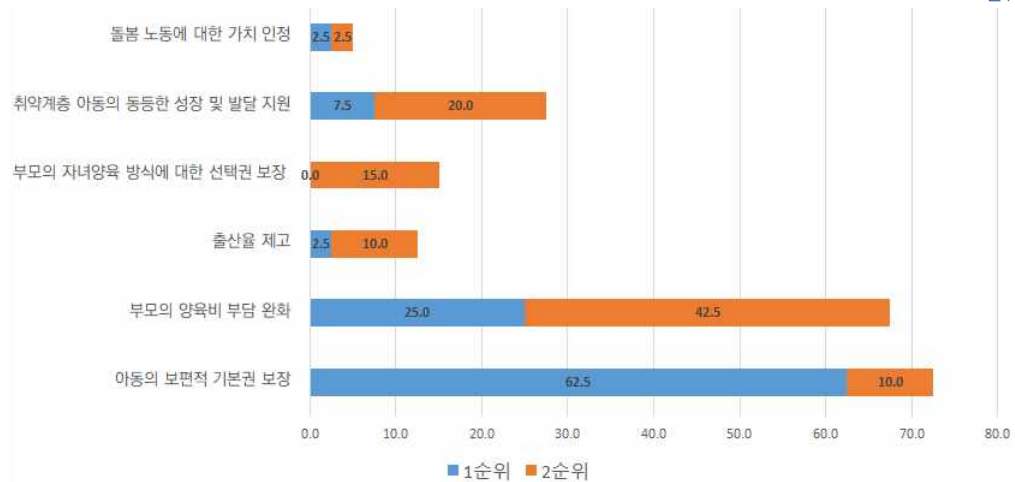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현금급여 제도를 통합 개편할 경우 우선해야 할 목적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1순위 응답에서 62.5%, 1, 2순위 합산에서 72.5%로 통합 개편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목적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67.5%)’,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27.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현금급여 통합 개편 시 우선 목적

단위: %



주: n=43명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표 3]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별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구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아동수당	6.33	5.12	4.35	3.26	5.33
부모급여	4.26	5.42	4.63	4.26	4.40
가정양육수당	3.51	3.95	3.42	4.53	3.58

주: 1) n=43명

2) 7점 척도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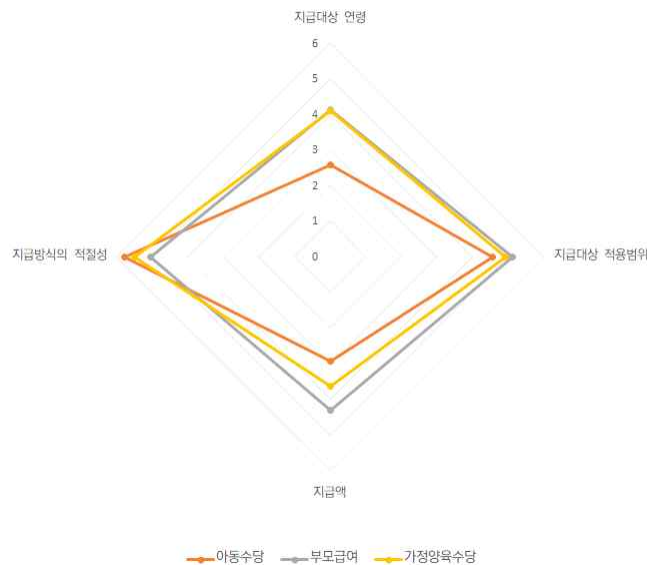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현행 기준으로 현금급여 제도의 지급대상 연령, 지급대상 적용 범위, 지급액, 지급방식의 적절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이 지급방식의 적절성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 지급액, 지급대상 적용 범위에서 모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급대상 연령(2.58점)과 지급액(2.93점) 수준의 적절성이 3점미만으로 가장 낮았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5.79점으로 가장 높았음.
- 부모급여는 지급대상 적용 범위(5.14점), 지급액(4.30점), 지급대상 연령(4.12점)에서 지원 수준 적절성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보다 높았음.

[그림 2] 현금급여 제도의 지원 수준 적절성

단위: 점



주: n=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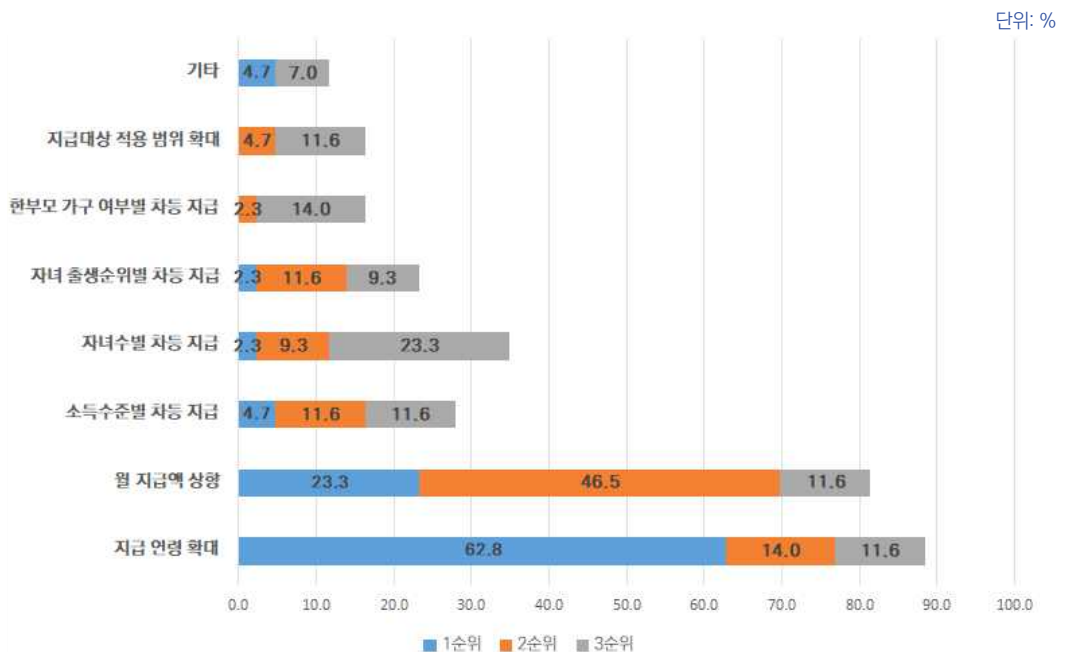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2) 제도 개편 방안 관련 의견

▶ 제도의 적절성 수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 아동수당에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6.02점(7점 만점)으로 가정양육수당(5.65점)과 부모급여(5.4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아동수당 제도를 개편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3순위를 합산하면 지급연령 확대와 월 지급액 상향 모두 80.0%를 상회함.
- 다음으로 자녀수별 차등 지급,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자녀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위한 우선 추진 개선안(1~3순위)



주: 1) n=43명

2) 지급대상 적용 범위에는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이 포함됨.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이 5.85점으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5점 이상(7점 만점) 동의 정도를 보인 항목은,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5.40점)’,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연계 지급(5.33점)’, ‘취약가구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5.25점)’ 순으로 나타남.

[표 4] 현금급여 개편 관련 방향성 동의 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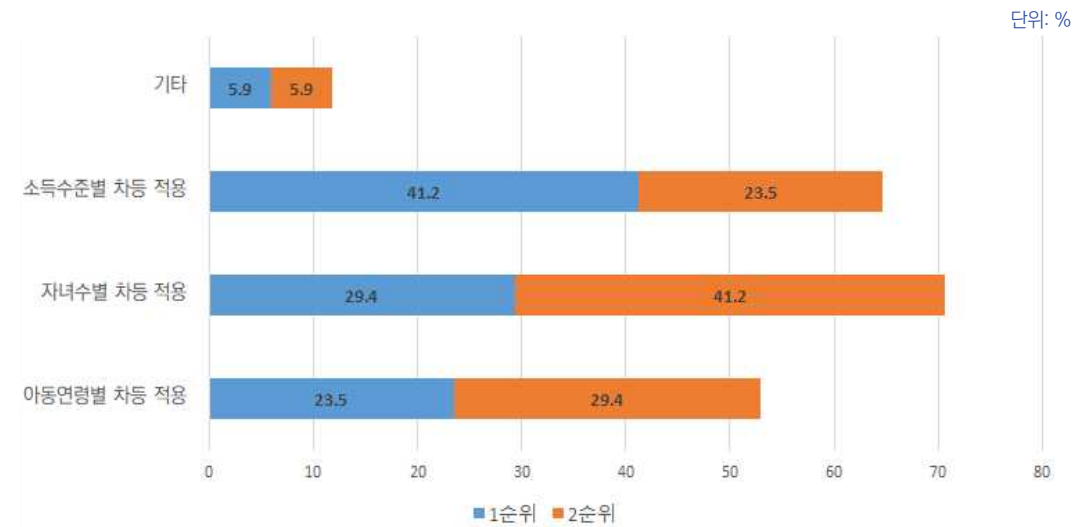
구분	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연계 지급	취약가구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
전체	5.85	5.40	5.33	5.25	4.08

주: 1) 응답자는 40명임.
 2) 7점 척도 문항임.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아동수당을 개편할 경우 적정 지급연령으로는 만 18세 미만이 75.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만 15세 미만이 12.5%였음.

- 아동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은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하는 방안(42.5%)’,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25.0%)’,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 후 연동하여 상향(10.0%)’ 순이었음.
- 아동수당에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차등 적용 기준에 대한 응답 결과 1순위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이 41.2%로 가장 높았으나,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자녀수별 차등 적용(70.6%)이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64.7%) 보다 높았음.

[그림 4] 아동수당 차등 적용 기준(1, 2순위)



주: 1) n=34명
 2) 자녀수별 차등 적용에 출생순위별 차등 적용 포함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 가정양육수당 개편 방안 중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 응답률이 4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 가정양육수당 폐지 및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25.0%이었음.
-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 의견이 72.5%, 가정양육수당 현행 유지는 12.5%,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상향은 15.0%로 축소 및 폐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으로는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알리지 등으로 기관 이용 및 집단 보육이 어려운 아동, 장애아를 돌보는 경우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경우) 모두 80.0% 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임.

[표 5] 가정양육수당 개편안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지급연령 축소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	일반 가정양육수당 폐지 및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행 가정양육수당 유지	현행 가정양육수당 체계를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상향	계
전체	5.0(2)	42.5(17)	25.0(10)	12.5(5)	15.0(6)	100.0(40)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으로는 기관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혼합하여 지급하는 현행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보육료를 포함한 전액 현금 지급이 22.5%, 보육료는 별도 지원하면서 전액 현금 지급이 17.5% 순이었으며, 전액 바우처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5.0%였음.

[표 6]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 방안

단위: %(명)

구분	전액 바우처 지급	전액 현금 지급 (보육료 포함)	전액 현금 지급 (보육료 별도 지원)	현행 지급방식 유지 (현금+보육료 바우처)	기타	계
전체	15.0(6)	22.5(9)	17.5(7)	37.5(15)	7.5(3)	100.0(40)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 아동수당을 확대할 경우 유관제도의 개편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장려금(47.5%), 첫만남이용권(40.0%) 순이었음.

[표 7]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 개편 필요성 여부

단위: %(명)

구분	개편 필요성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자녀장려금	47.5(19)	52.5(21)	100.0(40)
영유아보육료 지원	25.0(10)	75.0(30)	100.0(4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0.0(8)	80.0(32)	100.0(40)
육아휴직급여	12.5(5)	87.5(35)	100.0(40)
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	7.5(3)	92.5(37)	100.0(40)
첫만남 이용권	40.0(16)	60.0(24)	100.0(40)
지자체 출산지원금	55.0(22)	45.0(18)	100.0(40)
기타	12.5(5)	87.5(35)	100.0(40)

주: 기타 응답으로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가 있었음.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나.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 15차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육아가구의 연령별·소득분위별 양육비를 산출하였으며, 육아가구의 제도 이용 경험과 개선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녀연령과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총 8개 집단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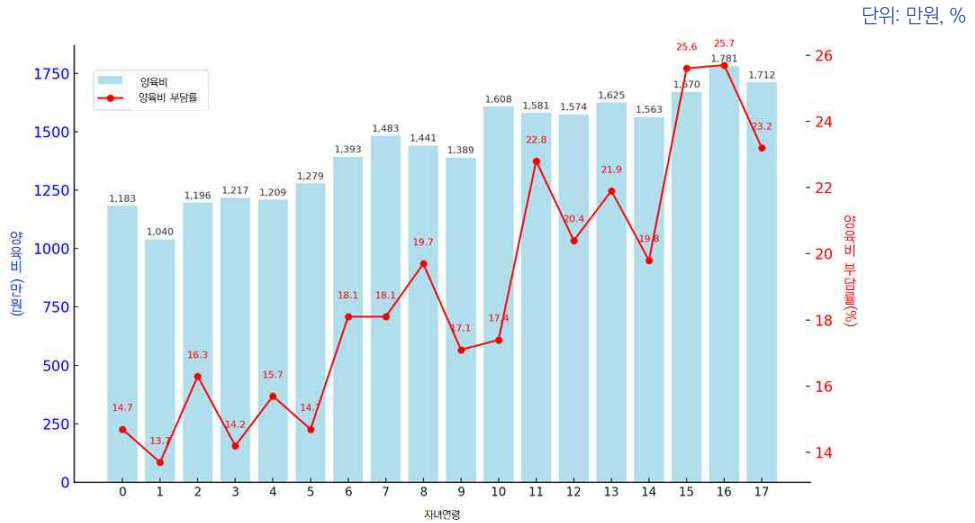
- FGI 집단구성은 자녀 연령대를 영아, 유아, 초등, 중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자녀 가구는 각 연령대별로 총 4개 집단을 구성하고,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영유아와 초등 자녀 집단을 각각 1개씩 구성함.

1) 육아가구의 연령별·소득분위별 양육비

▶ 15차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0~17세까지 아동의 연령별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출한 결과, 양육비는 연령 증가에 따라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양육비에는 식비, 문화생활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 관련 지출, 교육비, 보건의료비, 육아도우미 비용을 포함하고, 만 10세 이상에서 교통비, 통신비, 통신장비구입비를 추가 합산함.
-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로 양육비 부담률을 산출함.
- 출산 직후 큰 지출비용으로 인해 만 0세 양육비가 만 1세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초등학교 고학년 진학 시기(만 10세), 고등학교 시기에 양육비 부담률 증가가 두드러짐.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학업과 관련되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자녀연령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가구 경상소득을 소득분위 10분위로 구분하여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양육비 부담률은 감소 추세를 보임.

- 특히, 1분위에서 양육비 부담률은 52.6%로 매우 크며, 2분위와도 26.5%p 차이를 보임.
- 소득 2분위부터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며 10분위에서 양육비의 증가폭이 크나, 반대로 양육비 부담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10분위의 양육비 부담률은 12.5%로 상당히 낮아짐.

[그림 6]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 ▶ 자녀수별로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당연히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 당 전체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은 증가하나,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함.
 - 한 자녀 가구 1인당 양육비는 1,601만원으로 양육비 부담률 20.8%이며, 두 자녀 가구는 1,485만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404만원으로 감소함.
 -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커지나 아동 1명에게 투입되는 양육비는 감소하며, 이는 다자녀 가구가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현금지원 수준 상향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뒷받침함.

[표 8] 자녀수별 자녀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 %

한자녀 가구		두자녀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1,601	20.8	1,485	19.1	1,404	15.1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2) 육아가구의 현금급여 제도 및 개편 관련 인식

- ▶ FGI 참여자가 아동수당 개편 시 우선순위를 응답한 결과, 지급연령 확대 4.59점(5점 만점), 월 지급액 상향 4.38점 순으로 나타나 개편 우선순위 경향에서 전문가와 일치하나, 아동수당의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에 관한 의견에서는 차이를 보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 2순위 합산 결과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 지급연령 및 지급액 상향에 이어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FGI에서는 아동수당의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항목을 우선 개편하는 안은 2.63점으로 동의도가 낮은 편임.
 - 그러나 저소득 집단(2개 집단)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 4.6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개편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9] 아동수당 개편 시 우선순위: FGI 참여자 응답

단위: 점

구분	지급연령 확대	월 지급액 상향	연령별 차등	소득수준별 차등	자녀수별 차등	한부모 가구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평균	4.59	4.38	3.75	2.63	3.56	3.44	2.34

주: 1) n=32명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영아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현금급여의 지급액 수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

- 다른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보다 지급액 상향 선호가 높고, 아동수당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현실에 좀 맞지 않는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까지는 해줘야 나라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 되게 부담을 느끼면서 아이를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담 1)

이유식 먹는 것만 30~40만 원 든다는 애기인데 당연히 그 그냥 먹는 거 가장 필수적인 거 먹는 거 애기 돌봐주는 것만 하더라도 양육수당(아동수당)이 저는 5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면담 2)

- 실제 부모급여를 수급하는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급여 제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급여를 수급한 부모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지급수준이 높은 부모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짐.

저도 아무래도 부모급여가 가계 사정에는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부모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담 26)

저는 부모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받던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 29)

아무래도 이제 지역도 지역이고 이제 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거는 이제 아기 낳자마자 이제 시작 그때는 뭔가 시련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없었으면 아기를 낳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만 일을 하면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많이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 17)

절반이 주는데 아이 태어나면서 또 돈 들어갈 곳은 또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진짜 부모급여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고. (면담 28)

▶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급여의 연령 확대를 선호하며,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함.**

-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릴 때는 1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도 19살, 만 18세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비용을 늘려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면담 6)

아동수당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갈수록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걸 좀 고정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주다면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고정급여가 주면 또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면담 22)

-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영아기에 현금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거나, 영아기 집중 지원보다는 연령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그사실 놀라운 게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그래도 둘, 두 둘까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중략)... 100만 원이 조금 많지 않나 왜냐하면 둘 전까지 사실 100만 원까지 들어갈 일은 사실 없거든요. (면담 22)

영유아기 때는 사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특히 0세 1세 만 2세 그때 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좀 나이도 확대하고 금액도 좀 많이 증폭했으면 좋겠어요. (면담 25)

▶ FGI 참여자들은 양육 지원 중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가정양육수당을 불필요하다고 인식함.

- 가정양육수당의 악용을 지적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강조하는 진술들이 있었으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길 희망하는 부모들도 지급액 자체가 적어서 효과성이 낮은 제도로 인식함.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리고 근데 또 악용 사례가 있잖아요. ...(중략)... 양육수당을 폐지해서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영어 유치원으로 안 보낼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걸 폐지를 해서 저는 좀 더 나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면담 5)

약간 가정양육수당이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 양육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는데다가 더 지원을 해주고 애를 맡기고 여자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조금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면담 29)

-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은 영아기와 만 5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학 직전 연령에 가정양육수당을 재신청하는 경우는 영어 유치원 이용자가 상당수로 파악됨.

지금 저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또 그걸 받으려고 하니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따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또 놓치면 못 받고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면담 7)

저는 지금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유치원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어 유치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이 아니라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면담 9)

4 정책 제언

가. 아동수당 중심의 통합적 제도 개편

- ▶ 아동수당법의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과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소득보장 제도로서 아동수당 중심으로 통합적인 현금급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OECD 주요국의 대다수에서 아동수당은 아동 및 아동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핵심 제도로 실시되고 있음. 양육수당, 세제지원 등에서는 복지체제나 정책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아동수당은 체제에 상관없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제도인 아동수당의 개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가를 반영하면서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산발적인 개별 현금급여 제도 도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현금급여의 지급 수준을 조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제도적 틀 구축
 - 현금급여의 정치성에 의해 난립되지 않도록 전체 현금급여의 지급액을 고려하면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및 지급액 확대가 필요함.
 - 현금급여의 재정 및 대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 차이를 고려한 보편적 할당 방식이나 욕구에 따른 차등 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보편주의내 표적화(targeting)를 반영한 제도 설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관련법 개정 및 통합적 개편 과제

- ▶ 제도 개편을 위해 근거법인 아동수당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필요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 조정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4조 개정과 부가급여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필요
 -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연동되므로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부가급여를 아동수당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 수반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 지급액을 월 20만원, 저소득가구 부가급여를 도입할 경우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0] 아동수당 개편 시 관련법 개정안

관련법	현행	개정안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삭제

▶ 아동수당 개편은 아동수당 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도입,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 제안

- 이미 2024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19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발의안⁴⁾이 총 8개 발의되었음.
-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전에 지급액 조정방식 도입 선행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나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일시 상향(20~30만원) 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동수당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아닌 집단별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부가급여는 우선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우선하고, 이후 아동 연령 등 추가적인 차등지급 방식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동수당 개편은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과 연동되어 진행되어야 함.

- 현행 방식대로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하여 자녀세액공제 연령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수당이 만 18세까지 확대될 경우 폐지하거나 별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자녀장려금 제도는 아동수당 제도에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가 도입될 경우 아동수당으로 통합 필요

4) 전진숙의원 대표발의(2024. 6. 5.), 박성준의원 대표발의(2024. 6. 14.), 용혜인의의원 대표발의(2024. 6. 17.), 한병도의의원 대표발의(2024. 6. 18.),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2024. 6. 20.), 박민규의원 대표발의(2024. 7. 5.), 황정아의의원 대표발의(2024. 8. 5.), 김태년의의원 대표발의(2024. 9. 13)

- ▶ **농어촌 및 장애아 양육수당은 대상별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취약성이 있는 아동에게 조기 돌봄 및 교육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함. 다만, 단기간에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부모급여는 도입 당시부터 제도적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동수당법 내에서 영아기 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할 것인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 정액급여로 기능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함.**
 - 부모급여가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 정액급여 성격을 명확히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금에 함께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가능성이 있음.
 -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인해 특히 0세의 보육 시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 감소가 영아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고은혜·이일주(2015).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실천유아교육(구 Montessori 교육연구), 20, 1-23.
 -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 양미선·김나영·박은정·오미애·송신영(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정 부연구위원 ej.park@kicce.re.kr

육아가구에서 자녀의 의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¹⁾

김지현 연구위원

SUMMARY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육아하는 가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양육자 관점에서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보고자 함.
- 실제 육아가구의 부모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자녀의 가치를 크게 느끼고 있고, 비육아가구의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육아의 긍정성 측면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육아가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육아친화적 문화 형성 및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용이한 직장문화 제공 등의 노력으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1) 본고는 2024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연구제인 김지현·권미경·김문정(2024)의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배경과 문제제기

가. 육아하는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한국의 출생아수는 점차 줄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음.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합계출산율 0.72명(통계청 보도자료, 2024. 2. 28.)으로 지속적 감세를 보이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저출생 추세에 육아하는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김지현 외, 2024)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무자녀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없거나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의 응답이 가장 높아, 결혼 전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 부족’과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 향유’가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삶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가 부족 등의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문무경 외, 2016).

나. 육아가구의 부모됨 및 삶의 질 등 양육자 관점의 분석 부족

▶ 육아를 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는 양육자의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음.

- 지금까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활용, 기관 및 개인 돌봄을 통한 돌봄지원, 그 외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양육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의 분석이 부족하였음.
- 양육자의 삶의 질 영역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영향력 있는 영역을 탐색하고, 비육아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저출생 추세에 부모됨에 대한 의미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재의 청년들이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거쳐 왔듯이, 육아를 하는 부모로서의 가치관,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등 가치관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육아를 하는 가구와 육아를 하지 않는 가구의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음.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인식

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 ▶ 1,614명의 육아가구(연령별 할당) 양육자와 410명의 기혼무자녀 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음.
-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의 문항은 4점 척도 중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의 문항에서는 4점 척도 중 2점 초반대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비육아가구보다는 육아가구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높게 나타남.

[표 1]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사례수
전체	3.3	3.3	3.1	3.1	2.2	2.3	(2,024)
성별							
남성	3.4	3.3	3.2	3.2	2.3	2.4	(1,011)
여성	3.3	3.3	3.0	3.0	2.0	2.1	(1,013)
<i>t</i>	3.4**	1.8	4.6***	5.3***	7.5***	9.5***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4	3.4	3.1	3.2	2.2	2.3	(1,614)
비육아가구	3.2	3.1	3.0	2.8	2.1	2.0	(410)
<i>t</i>	5.8***	7.3***	3.5**	9.0***	1.8	6.7***	

주: 1)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③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④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다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의 세 질문으로 부모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부모로서의 책임감, 심리·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있어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비육아가구 응답자가 육아가구 응답자보다 책임감,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한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수
전체	3.2	3.4	3.3	(2,024)
성별				
남성	3.0	3.2	3.2	(1,011)
여성	3.3	3.5	3.4	(1,013)
<i>t</i>	-8.4***	-10.8***	-7.2***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1	3.3	3.2	(1,614)
비육아가구	3.4	3.5	3.5	(410)
<i>t</i>	-6.9***	-4.9***	-7.3***	

주: '전혀 동의하지 않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 다음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vs.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이 선택비율을 살펴봄.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61.0%)이 여성(46.2%)보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응답하였고, 비육아가구(67.8%)가 육아가구(41.0%)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26.8%p 차이로 높게 응답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음.
- 육아가구 중에서도 자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자녀 기준 영유아 양육 육아가구가 초등학교생 양육 육아가구보다 자녀를 위해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 부모책임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
전체	53.6	46.4	(2,024)
성별			
남성	61.0	39.0	(1,011)
여성	46.2	53.8	(1,013)
$\chi^2(df)$	44.742(1)***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9.0	41.0	(1,614)
비육아가구	32.2	67.8	(410)
$\chi^2(df)$	94.780(1)***		
첫째자녀 연령			
영아	52.5	47.5	(402)
유아	59.1	40.9	(406)
초등학교 저학년	64.2	35.8	(402)
초등학교 고학년	60.4	39.6	(404)
$\chi^2(df)$	11.836(3)**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가. 부모가 된다는 것

-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부모 총 38명(2)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자녀 연령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음.

2)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령별 부모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5	5	4	4	5	5	5	5	38

[표 4] 부모가 된다는 것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성숙해질 기회 선택받은 일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	책임감(3) 육아로 인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	나를 희생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뒷받침해주는 존재 책임감이나 희생 책임감-내가 부여받은 일	내 삶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 (배려, 타협, 인내 등)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삶 희생과 책임감/ 이해폭이 넓어지는 성장
아버지	어른이 된다는 것 가족관계를 더 다질 수 있는 기회 분위기가 화목해짐	성장한 느낌 어른이 된 것 같음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책임을 지는 일	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성숙/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 정임을 알게 됨.

-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정임.

저는 육아를 해서, 육아로 인해 제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제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제가 철들지 않았을 것 같다. (유아 모2)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남으로써 조금, 전에는 저만을 위해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포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립 관계가 생겼을 때도 전에 같았으면 나를 위해서 주장하고 이겼을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서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또 참아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 (초고 모4)

-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느낌을 받음.

저도 다른 분들 말하신 거랑 공감하는 게, 저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긴 한데, 개네들보다 제가 살짝 더 어른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아 부1)

부모가 됐다는 거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철없이 맨날 지내오다가 아이가 생겨서 제가 또 부모가 되니까,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제는 슬슬 이해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아 부1)

▶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존재를 얻는 동시에 무궁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임을 느낀다고 하였음.

-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생명체를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일이며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

부모가 된다는 게, 이걸 진짜 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성인까지면 다행이고 어떻게 아이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책임져줘야 되고...(중략)...끝까지 계속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엄청난 책임감을 요하는 거구나,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존재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구나. (영아 모5)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중략)... 어쨌든 20살 넘어서 책임을 지고 독립까지 시키는 게 육아의 끝이니까, 잘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 것 같아요. (유아 모1)

-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받은 일이며,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얻게 되는 중요한 기회이며 삶이 풍요로워 지는 일임.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거? 무한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영아 부5)

진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엄마가 된다는 게 진짜 굉장히, 진짜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아 모2)

나. 자녀의 의미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자녀 연령별, 부모별 의견을 살펴보았음.

[표 5] 자녀의 의미 표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찰싹떡	살아 있는 CCTV.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선물	나와는 다른 사람
	매미	거울.	삶의 원동력-내가	선물
	공기 같은 존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야 하는 이유	감사함-기특하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	소중한 존재	선물/분신	벅차오름이 있는 감사한
분신	스펀지	보물 같은 존재	선물임과 동시에 흑-평생	존재
			함께하면서 관리해야하는 존재	또 다른 나(2)
아버지	나를 무한히 믿어주는 존재	삶의 전환점	양파	또 다른 나
	에너지	거울	보석의 원석	나무
	지켜줘야 하는 존재		나의 또 다른 자아	물
	작은 자아		나를 비춰주는 거울	거울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 ▶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또 다른 나처럼 나의 모습을 너무 닮은, 나의 행동이 그대로 반영되는 인격체임을 느끼게 된다는 뜻으로 자녀란 분신 같은 존재이며, 또 다른 나, 살아있는 CCTV, 거울 등으로 자녀를 표현하였음.**

분신 같아요.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저를 보는 것 같고 행동도 내가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다 제 분신 같은 존재. (영아 모3)

자녀는 비유를 하자면 저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모가 된다는 거는 어렵지만 그만큼 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고 부2)

자녀란, 또 다른 나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나. 애가 점점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독립시키고 애가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애를 보면 지금 또 다른 나인 것 같은 기분? (초고 모2)

근데 좋은 것만 배우면 좋는데 습관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서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거울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유아 모2)

- ▶ **자녀는 하늘에서 나에게 준 선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임.**

저는 자녀를 비유하면, 자녀는 나무 같아요. 제가 잘 키우고 가꿔서 크게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가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무가 작게도 클 수 있고 같은 나무라도,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무라 생각을 하고. (초고 부1)

아까 전 질문에서 저는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무한히 나를 의지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영아 부5)

저도 아이한테 항상 많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아이한테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는 보물보다 더 소중하고 엄마보다 더 소중하고 막 이런 말 많이 해 주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 엄마와 똑같이 저도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한테도 계속 말해줘요. 너는 너무 소중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아 모3)

다. 자녀가 생긴 후 가장 행복한 순간

- ▶ **자녀가 생긴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질문하여 그 응답들을 정리해보았음.**

[표 6] 자녀의 의미 표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처음 모유수유 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밴드 붙여줄 때	처음 엄마 했을 때(33개월)	말하기 시작할 때
	쌍둥이라 둘이 잘 놀 때	엄마가 최고야 할 때(웃는 게 예뻐~)	쌍둥이라 작게 낳았지만 잘 크고 있는 자체가 행복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할 때
		점차 대화가 되고 나의 마음을 알아 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이 어렸을 때
			입학식 때	아이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동생 예뻐해 줄 때			
아버지는 말 들었을 때(2) 배말이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왔던 모습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날 필요로 해서 찾아올 때 2018.3.15.(아이생일)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아이가 성취를 이룰 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매순간 행복함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루하루가 행복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처음 불렀을 때라고 하였음.**

그래도 아빠라는 단어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아빠 된 거구나 라는. 가장 그때가 너무... 소리는 안 들렸지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아 부1)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돌아올 때 저를 보고서는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빠! 막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아 부5)

저도 애가 5살 때인가 그때, 유치원에서 시킨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가, 진짜 내가 내 몸이 식아가면서 낳고 키웠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저 모2)

▶ **아이 존재 자체가 행복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라고 하였음.**

아무래도 저희 애들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 교수님한테 일찍 낳고 싶다고, 혼났거든요. 근데 낳긴 했어야 됐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잘 성장해 주고 있고, 아프지 않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초저 모5)

사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거의 다 동일하게 행복하긴 했는데,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웃음을 짓든지 무서워서 울든지, 어쨌든 안아달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를 필요로 해서 찾아올 때 행복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아 부3)

일단 행복했던 순간은 매 순간이에요. (초저 부4)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였으며, 초등이상의 부모들은 자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음.**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등학교도 남았고 대학교도 남았고 아이가 커가야 될,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친구들이랑 줄 서서 앉아 있고 교실에 혼자 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아 저만큼 많이 키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만족감도 컸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초저 모3)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째 있고 둘째 태어나면서, 둘이 아기 때 첫째가 둘째한테 이유식 먹여준다고, 먹여주면서 앞에서 또 첫째 앞에서 막 장난치면서 웃기려고 하면서 둘이 웃고 껴안고 이랬을 때 봤었을 때가, 지금도 가끔 그 영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둘째가 거기서 박수 치면서 이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둘째는 첫째 1호 팬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너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귀엽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초고 모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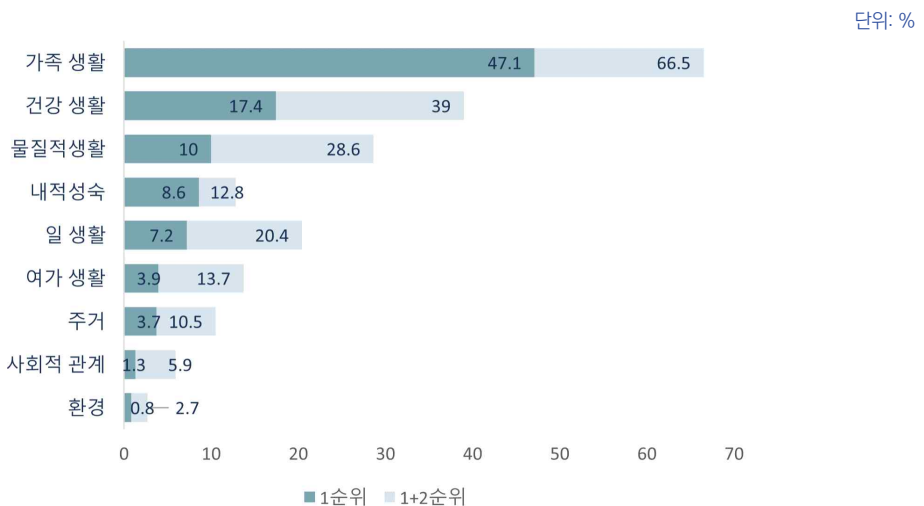
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

가. 육아가구의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인식

▶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현재상황과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노력을 쏟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향상시키고 싶은지’의 세 가지를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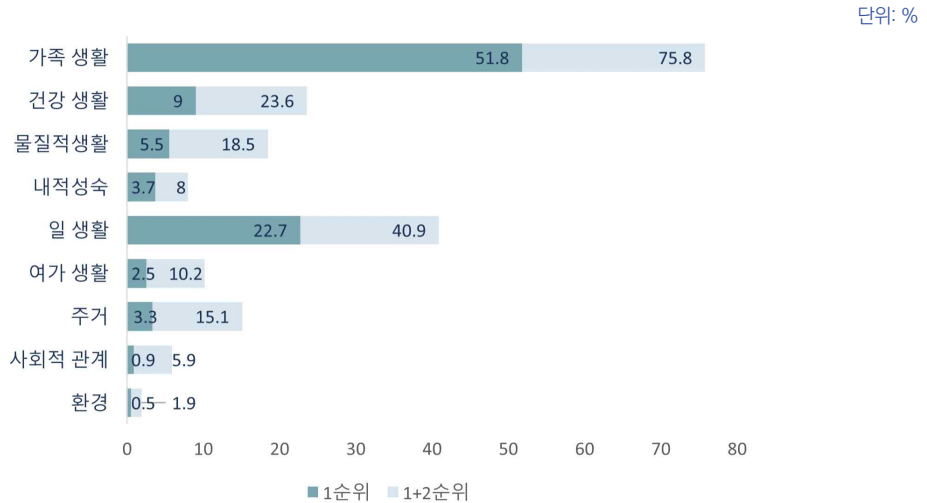
- 먼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47.1%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건강’ 17.4%, ‘소득’ 10%, ‘내적 성숙’ 8.6%, ‘일’ 7.2%, ‘여가’ 3.9%, ‘주거’ 3.7%, ‘사회적 관계’ 1.3%, ‘환경’ 0.8%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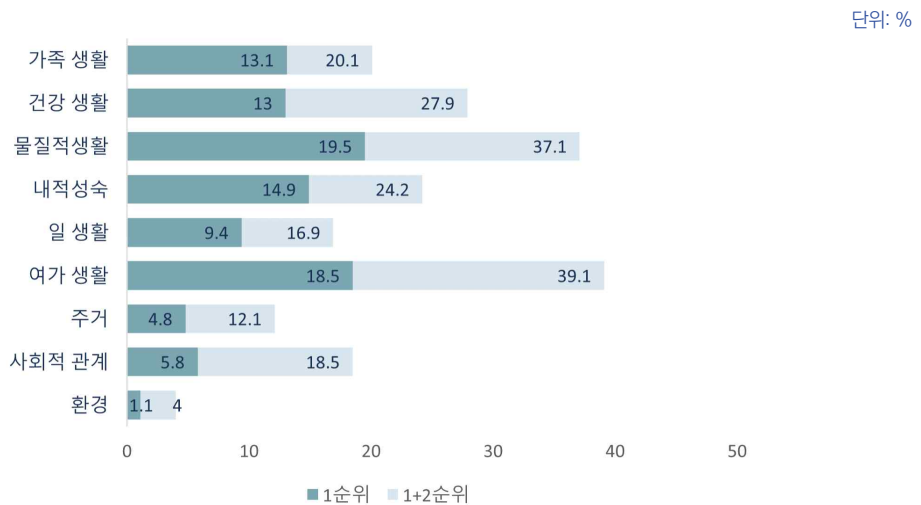
- 다음으로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이라는 응답이 51.8%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일(직장)생활’ 22.7%, ‘건강생활’ 9%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림 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는 영역



-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물질적 생활(19.5%)'과 '여가(18.5%)'라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은 '내적 성숙' 14.9%, '가족생활' 13.1%, '건강생활' 13%, '일(직장) 생활' 9.4%, '사회적 관계' 5.8%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여가' 39.1%, '물질적 생활' 37.1%, '건강생활' 27.9%, '내적 성숙' 24.2% 등의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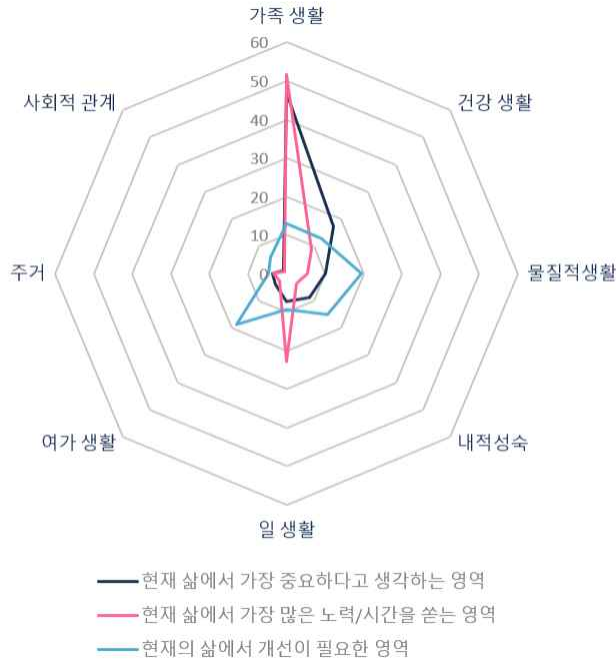
[그림 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 [그림 4]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영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동시에 나타냈음.

- 육아가구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삶에서 가족생활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시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영역이기도 함.
- 하지만, 일 영역은 중요도에서는 높지 않지만 물질적 생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쏟고 있는 정도가 가족생활 다음으로 높아, 시간 사용은 가족생활과 일 생활에 치중되어 있음.
-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여가생활, 물질적 생활, 내적성숙 등의 영역이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시간사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가생활을 더욱 향유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중요도/시간사용/개선필요 정도



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분야

▶ 전반적으로 비용, 시간, 돌봄, 주거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교육정책은 그 뒤를 따랐음.

- 1+2+3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비용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58.7%, '양육 시간 지원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5.8%,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47.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이는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마련’의 큰 줄기인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이라는 큰 틀과 같은 맥락임.

세부 집단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이기도 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을, 여성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더 선호함.
- 자녀 연령으로는, 영유아가구에서는 시간지원,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고르게 높았고, 초등 저학년 집단에서는 양육친화문화에 대한 지원이 타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고학년 집단에서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가 타집단 대비 높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에의 요구가 높으나,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더 요구함.
-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외벌이 가구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을 더 높게 응답함.
-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비용지원, 시간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경향성을 보임.

[표 기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

단위: %, (명)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1+2+3순위 전체	55.8	58.7	47.8	34.6	28.0	14.5	27.8	21.5	10.5	0.4	-
1+2순위 전체	39.1	44.1	29.2	25.0	17.8	7.7	17.7	12.1	7.0	0.2	-
1순위 전체	20.1	26.1	11.5	13.4	8.0	2.7	9.1	5.1	3.8	0.2	(2,024)
성별											
남성	16.9	28.0	10.9	15.3	8.0	3.0	8.9	4.9	3.9	0.2	(1,011)
여성	23.3	24.3	12.1	11.5	7.9	2.5	9.3	5.2	3.7	0.2	(1,013)
$\chi^2(df)$					19.689(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5	30.5	11.1	14.1	6.9	2.3	8.0	7.3	5.0	0.4	(262)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16.1	28.4	11.1	14.6	6.5	3.4	9.6	5.6	4.4	0.4	(522)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3	30.9	11.4	12.7	8.3	2.6	7.0	3.5	4.2	0.0	(456)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8.1	21.7	9.0	12.2	8.4	3.2	8.1	6.4	2.6	0.3	(345)
750만원 이상	22.8	19.4	14.4	13.4	9.6	1.8	12.1	3.9	2.7	0.0	(439)
$\chi^2(df)$					72.647(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0	23.7	12.0	14.3	7.4	2.3	8.4	4.7	3.1	0.0	(1,306)
외벌이	13.3	30.2	10.6	11.4	9.4	3.4	10.2	6.0	4.7	0.7	(615)
그 외	10.7	33.0	10.7	14.6	6.8	3.9	10.7	3.9	5.8	0.0	(103)
$\chi^2(df)$					62.709(18)***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3.1	25.9	12.7	12.4	4.7	3.5	8.2	5.2	4.0	0.2	(402)
유아(만3-5세)	21.7	26.6	10.3	13.1	7.6	3.0	7.4	6.4	3.9	0.0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5.9	25.9	12.4	11.2	9.0	3.7	11.7	4.7	5.2	0.2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16.3	31.9	8.7	11.4	12.6	2.5	8.2	4.2	3.7	0.5	(404)
$\chi^2(df)$					43.933(27)*						
자녀수											
1명	20.8	25.0	12.6	11.6	7.7	3.5	9.0	4.8	4.8	0.2	(965)
2명 이상	16.9	31.4	8.6	12.6	9.7	2.6	8.6	5.7	3.4	0.3	(649)
$\chi^2(df)$					20.446(9)*						

주: ① 양육 시간 지원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② 비용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③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④ 주거 지원 정책(특별공급, 청약 가점 등) ⑤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 ⑥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⑦ 양육 친화적인 문화(양육에의 가치 인정, 아동 환대 등의 분위기) ⑧ 아동 의료시설 확대 ⑨ 육아기 부모 대상 자녀 및 부모 상담 ⑩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5 정책 제언

▶ **육아가구의 삶의 질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의 양육자가 자녀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며 스스로 성숙해가는 내적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음.**

-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경험, 누군가를 책임져야하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모습 등 내적 성장 경험, 가족관계 개선 경험을 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비육아가구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막연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육아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친화적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임.

가. 미디어에서의 육아에 대한 긍정성 노출을 통한 인식 확산

▶ 미디어를 통하여 드러나는 육아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힘들기만 하게 비춰지고 있어 이로 인해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육아를 하고 있는 양육자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 미디어를 통해 육아의 긍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노출과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저출생 현상들이 가속되고 있어, 이에 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함.

나.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 지원

- ▶ 육아가구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녀로 인한 관계로 관계 확장을 경험하고, 자녀를 위한 여행으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긍정적인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었음.
 -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육아가구의 경우 여행 및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가 높아,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을 확대하여 육아가구가 자녀와 함께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및 문화비 지원 등 다양한 경험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시설 및 지역공공기관 문화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가족단위 방문 시 식당 및 숙박시설 할인, 지역문화행사에서도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자녀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 또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 육아지원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사회 문화 조성

- ▶ 출산과 양육을 양육자가 직접 돌보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눈치로 인해 양육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육아가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임.
 - 일부 육아가구가 활용하는 육아지원정책 및 사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로 인해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어려움 및 육아휴직자 대상 불이익 등의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 내 문화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를 통한 인식이 필요함.

3)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3.1.25.).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94> (인출일자 2024. 1. 8.)

참 고 문 헌

- 김지현·권미경·김문정(202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배윤진·김문정(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1.3.). 남성육아휴직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94> (인출일자 2024. 1. 14.)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통계청 보도자료(2024. 2. 28.)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

김지현 연구위원 jhkim@kicce.re.kr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와 대응 과제¹⁾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SUMMARY

- 긴급돌봄 수요는 이른 하원 등으로 인해 상시로 요구되는 틈새보육과 구분되므로 종일제돌봄의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제도화가 요구됨.
-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7.3%로 조사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 긴급돌봄 유형은 자녀가 아픈 경우,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가정내 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동돌봄 관련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과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을 병행하는 지원방식, 기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세부과제를 제안함.

1)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문제제기

- ▶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교육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여 종일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일부에서는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야간연장보육을 제공함(보건복지부, 2024: 397).
 -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만 3~5세) 중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돌봄활동(유아교육법 제2조, 12조, 13조)(교육부, 2024b: 10)으로, 운영시간은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함.
- ▶ 초등자녀를 대상으로는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공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학교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늦은 오후 시간대의 긴급돌봄 대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초등학생 1학년에 이어 2025년에는 초등학생 2학년 까지 매일 2시간을 무료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교육부, 2024a: 1).
 - 2024년부터는 기존에 초등방과후와 초등돌봄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통합하여 늘봄학교 중심의 단일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지역내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을 구축할 예정임(교육부, 2024a: 16).
 - 이들 계획에 따라 기존의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오후 1~5시 위주였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 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교육부, 2024a: 20).
- ▶ 기관 중심 돌봄서비스 이외에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힘든 경우에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a: 65-69).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 앱을 통해 1회 2시간 이상,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 57-58).
 - 서비스 신청시간의 경우 2023년부터는 계획되지 않는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시간 전으로 단축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여성가족부, 2023: 1).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 16, 69).

▶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긴급돌봄은 일시적이고 예고되지 않고 상황에서 요구되므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이 글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특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

-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가구의 긴급돌봄 수요를 상시로 발생하는 틈새보육 수요와 차별화하고, 긴급한 사유별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안함.
- 특히 대표적인 돌봄 공백으로 지목되는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2 긴급돌봄의 수요와 대응 실태²⁾

가. 조사 개요

▶ 긴급돌봄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막내 자녀 기준으로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가구 총 1,5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징은 이하 <표 1>과 같음.

[표 1]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	43.4(679)	200만원 이하	1.9(29)
여성	56.6(886)	201~300만원	8.3(130)
연령		301~400만원	17.1(267)
29세 이하	3.5(55)	401~500만원	19.5(305)
30~39세	53.8(842)	501~600만원	18.3(286)
40~49세	40.8(639)	601~700만원	13.5(211)
50세 이상	1.9(29)	701~800만원	9.8(153)
평균	38.4세	801만원 이상	11.8(184)

2) 이하 조사결과는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거주지역 규모		총자녀수	
대도시	61.3(960)	1명	47.1(737)
중소도시	29.9(468)	2명	44.0(689)
읍면지역	8.8(137)	3명 이상	8.9(139)
맞벌이 가구 여부		평균	1.6명
맞벌이 가구	71.8(1,123)	막내자녀 연령	
홀벌이 가구	27.8(435)	만0~2세	33.2(519)
근로 안함	0.4(7)	만3~5세	32.6(510)
		초등자녀	34.2(536)
	계(수)		100.0(1,565)

- 여성이 56.6%를 차지하며, 30~39세와 40~49세가 53.8%와 40.8%로 다수이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71.8%로 나타나며, 막내자녀 연령은 0~2세가 33.2%, 3~5세가 32.6%, 초등자녀가 34.2%로 유사한 수준임.

나. 자녀돌봄의 공백과 부모 직접돌봄의 가능성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자녀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음.

1)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원시각의 경우 80.1%, 하원시각의 경우 73.1%에 그침.

[표 2]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평일 기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등원 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8시 51분	81.0	19.0	100.0(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44분	80.1	19.9	100.0(583)
홀벌이 가구	9시 13분	83.3	16.7	100.0(209)
모두 근로 안함	10시 0분	100.0	0.0	100.0(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5. 재구성.

[표 3] 주중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 시각) 충족 여부(평일 기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하원 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16시 47분	74.3	25.7	100.0(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7시 1분	73.1	26.9	100.0(583)
홀벌이 가구	16시 8분	77.5	22.5	100.0(209)
모두 근로 안함	15시 0분	100.0	0.0	100.0(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7. 재구성.

-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등·하원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희망하는 등원 시각은 오전 8시 25분으로 현재 보다 26분이 빠르고,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18시 20분으로 현재보다 1시간 33분이 늦은 것으로 조사됨.

[표 4] (이용시간 불만족 가구)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

단위: 시, 분, (명)

구분	희망 등원시각	(수)	희망 하원시각	(수)
전체	8시 25분	(151)	18시 20분	(204)
자녀연령				
영아	8시 22분	(66)	18시 22분	(94)
유아	8시 28분	(85)	18시 17분	(110)
<i>t</i>	-0.407		0.38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20분	(116)	18시 28분	(157)
홀벌이 가구	8시 42분	(35)	17시 51분	(47)
모두 근로 안함	-	-	-	-
<i>F</i>	1.564		7.06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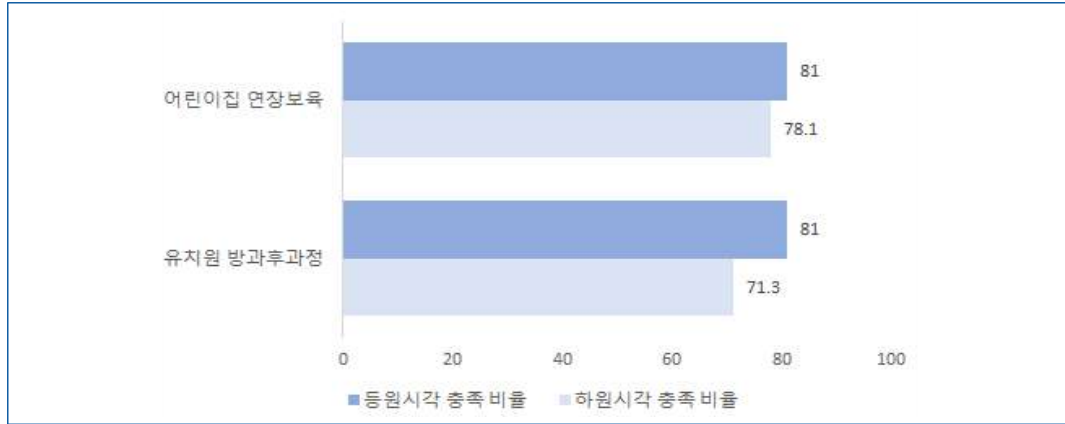
** $p < .01$.

- ▶ 어린이집 연장보육 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원 시각에 비해 하원 시각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 응답한 비율은 공히 81%에 그침.
-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저학년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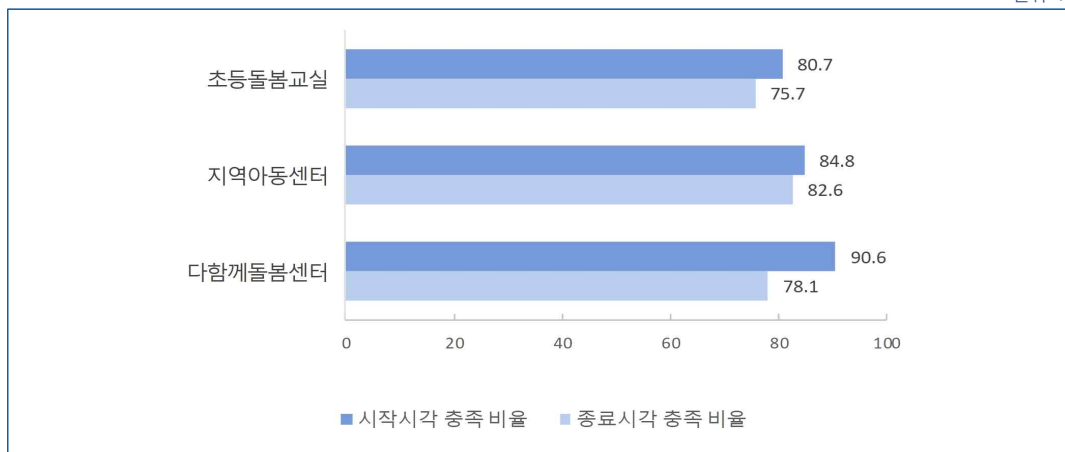
2) 초등저학년(1~3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 초등돌봄교실의 시작과 종료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와 75.7%에 그쳐(n=243)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응답 사례수가 적으므로 (n=46, n=32)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2] 초등저학년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주: 서비스 유형별 전체 사례수는 초등돌봄교실 243명, 지역아동센터 46명, 다함께돌봄센터 32명임.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저학년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9.

3)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부모 직접돌봄의 가능성

- ▶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므로,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가능성을 살펴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가족돌봄휴가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이하로 저조하고,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20%선에 그침.
 -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가능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5]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 중	필요시 이용 가능	제도 있으나 이용 어려움	제도 미 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잘 모름	계(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5	17.5	41.1	13.7	8.9	10.3	100.0(1,558)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7.7	19.4	36.6	19.4	9.1	7.8	100.0(1,558)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0(1,558)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1	100.0(1,558)

주: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2.

[표 6]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가능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별

단위: %(명)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 돌봄휴가	(수)
전체	26.0	27.1	15.1	25.4	(1,55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4.8	11.1	22.2	7.4	(27)
201~300만원	22.2	24.6	13.5	23.0	(126)
301~400만원	20.9	17.6	12.0	22.1	(267)
401~500만원	27.2	28.5	12.4	23.3	(305)
501~600만원	25.6	25.2	11.6	27.0	(285)
601~700만원	27.0	29.9	20.9	29.4	(211)
701~800만원	34.0	34.7	19.6	30.8	(153)
801만원 이상	28.9	35.8	19.5	26.1	(184)

주: 1) ‘현재 이용 중’과 ‘필요 시 이용가능’ 빈도를 합한 비율임.

2)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2.

다. 긴급돌봄 사유와 대응 실태

긴급한 사유별로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그리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돌봄의 실태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음.

1) 긴급돌봄 사유 및 어려움 정도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평균 4.14점(5점 만점),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4.09점,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98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3.95점, 자녀를 출산한 경우 3.93점, 급작스러운 연장근로와 일시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공히 3.88점, 이른 시각의 출근 3.85점, 주말 또는 휴일에 긴급하게 일하는 경우 3.82점 순으로 조사됨.

[그림 3]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5점 평균

단위: 점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5.

2) 긴급돌봄 발생 빈도와 시간대

-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빈도는 갑작스러운 야근과 이른 출근의 경우 1주일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와 7.8%로 가장 빈번하고, 이외 사유로 인한 어려움은 한 달에 2~3회와 연간 3~4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는 한 달 이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서 1주일에 한 번 2.5%, 한 달에 2~3회 20.6%, 한 달에 1회 24.5%로 조사됨.

[표 7] 사유별 긴급돌봄 수요 발생 빈도

단위: %(명)

구분	1주일 기준 한번	한달 기준 2~3회	한달 기준 1회	두달 기준 1회	연간 3~4회	연간 1~2회	계(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5	20.6	24.5	16.9	24.5	11.0	100.0(1,09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0	6.8	14.5	16.9	29.6	31.2	100.0(1,139)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5.7	15.8	19.7	18.3	17.1	23.5	100.0(1,040)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3.7	11.2	18.8	15.5	20.3	30.4	100.0(978)
이른 출근 및 근무	7.8	14.6	16.1	13.4	19.7	28.4	100.0(1,024)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2.9	9.1	13.0	11.8	16.4	46.7	100.0(9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2.9	5.3	10.1	11.1	18.7	52.1	100.0(895)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2	3.5	7.6	10.1	26.9	50.8	100.0(1,176)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4.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를 시작과 종료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른 출근 및 근무의 경우가 오전 7시 12분으로 가장 이르고, 갑작스런 야근의 경우가 19시 46분으로 가장 늦은 시각으로 조사됨.

 - 긴급 사유에 따른 돌봄 공백의 시간대는 기관 이용가구에서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틈새보육 시간대와 달라서 기관 이용가구의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표 8]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 공백 시간대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8시 32분	16시 2분	(70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8시 58분	16시 56분	(447)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15시 13분	19시 46분	(618)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9시 6분	16시 14분	(482)
이른 출근 및 근무	7시 12분	12시 26분	(531)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9시 35분	16시 15분	(3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9시 54분	16시 10분	(262)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9시 36분	16시 44분	(263)

주: 1) 돌봄 공백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긴급 상황별로 자녀돌봄의 공백 발생 빈도가 ① 1주일에 한번 ② 한 달에 2~3회 ③ 한 달에 1회 ④ 두달에 1회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5.

3)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긴급돌봄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자녀 출산이나 지연에 영향을 미쳐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7.3%,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있다’ 54.4%,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경우가 있다’ 53.0%로 조사됨.

[표 9]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유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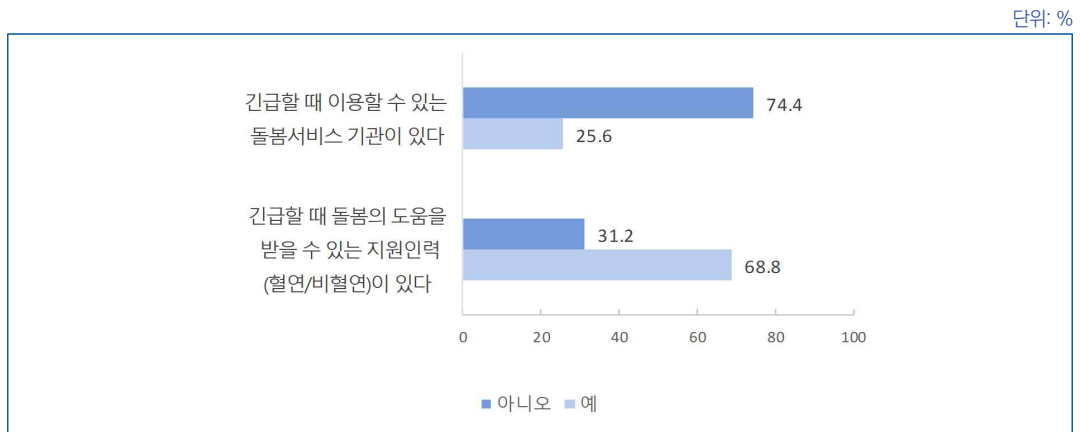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44.4	55.6	100.0(1,364)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 연장 및 반복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4	45.6	100.0(1,33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3.0	47.0	100.0(1,331)
긴급돌봄이 쉽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33.2	66.8	100.0(1,228)
긴급돌봄이 쉽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43.5	56.5	100.0(1,286)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5	45.5	100.0(1,322)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3	36.7	100.0(1,364)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7.3	42.7	100.0(1,297)
긴급돌봄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 (조부모 거주지 또는 선호하는 기관 인근 지역 등)	49.2	50.8	100.0(1,313)

주: 세부 항목의 ‘해당사항 없음’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6.

- ▶ 긴급한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돌봄인력은 68.8%로 높게 나타나며, 돌봄서비스 기관은 25.6%에 그침.

[그림 4]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돌봄기관 유무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7.

- 주요 변인별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자녀 및 영아가구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25%선으로 낮아서 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표 10]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자녀특성별

단위: %(명)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기관 있음	(수)
전체	68.8	25.6	(1,565)
자녀연령			
영아	72.1	26.0	(519)
유아	69.0	26.5	(510)
초등자녀	65.3	24.3	(536)
$\chi^2(df)$	5.639(2)	0.759(2)	
출생순위			
첫째자녀	69.9	24.2	(737)
둘째자녀	69.8	26.7	(689)
셋째자녀 이상	57.6	27.3	(139)
$\chi^2(df)$	8.908(2)*	1.474(2)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67-168. 재구성.

* $p < .05$, *** $p < .001$.

라. 긴급돌봄 지원요구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아파서 등원 또는 등교하지 못한 경우가 1순위 기준 47.2%, 1, 2순위를 합한 경우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가 1순위 기준으로 19.1%, 1, 2순위를 합하여 37.6%, '급작스러운 연장근로'가 1순위 기준으로 9.3%, 1, 2순위를 합하여 23.0%로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표 1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체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47.2	57.9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9.1	37.6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9.3	23.0
(긴급)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8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는 경우	4.9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3.3	10.0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2.0	8.2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7	7.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1.6	4.6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0.4	2.4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7	16.9
기타	0.1	0.3
계(수)	100.0(1,565)	(1,565)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4.

-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돌봄 지원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용기관내 긴급돌봄 제공'이 평균 3.66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 그 다음으로는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2.95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2.92점 순으로 조사됨.

[표 12]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단위: %(명), 점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내 돌봄 공간	6.4	9.1	21.3	39.1	24.2	100.0(1,565)	3.66
의료기관 내 돌봄시설	15.1	18.7	34.7	22.1	9.4	100.0(1,565)	2.92
가정 파견 전문 돌봄인력	15.0	19.6	31.2	23.8	10.3	100.0(1,565)	2.95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17.8	21.6	31.0	22.4	7.2	100.0(1,565)	2.79

주: 1) 이용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2) 부모 등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경우의 선호하는 양육방식임.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8.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한부모가족 우선지원과 맞벌이 가구 우선지원이 평균 3.92점과 3.88점으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이용기관의 긴급돌봄 제공 3.80점, 어린 아동 우선지원 3.72점, 긴급돌봄 사유와 무관하게 지원 3.70점, 다자녀가구 우선지원 3.66점 순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표 13]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주양육자 돌봄이 힘든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 원칙에 대한 동의 수준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의 긴급돌봄 제공	4.7	7.1	19.7	40.9	27.6	100.0(1,565)	3.80
맞벌이 가구 우선 지원	3.6	5.4	22.9	35.5	32.7	100.0(1,565)	3.88
한부모 가구 우선 지원	3.0	6.4	21.1	34.8	34.8	100.0(1,565)	3.92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5.2	7.5	28.8	33.6	24.9	100.0(1,565)	3.66
어린 아동 우선 지원	3.6	8.1	27.2	34.9	26.2	100.0(1,565)	3.72
긴급돌봄 신청자 일괄 지원(긴급돌봄 사유 무관)	5.6	9.3	25.3	28.8	31.0	100.0(1,565)	3.70
긴급돌봄 지원 한도 설정(연간 최대 일수)	8.0	11.4	27.2	30.5	22.9	100.0(1,565)	3.49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소득 ↓, 지원 ↑)	8.0	10.8	29.9	30.2	21.2	100.0(1,565)	3.46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0.

▶ **아동연령대별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3개월에서 35개월 영아 자녀, 유아 자녀(만3~5세), 12개월 이하 영아자녀가 평균 4.16점, 4.13점, 4.09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는 반면, 초등학교학년(4~6학년) 자녀는 2.87점으로 낮은 수요를 나타냄.**

[표 14] 아동연령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아동연령별 긴급돌봄 지원 필요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영아 자녀(0~12개월)	3.8	6.4	15.1	26.6	48.0	100.0(1,565)	4.09
영아 자녀(13~35개월)	1.7	4.2	15.3	33.7	45.1	100.0(1,565)	4.16
유아 자녀(만 3~5세)	1.2	3.4	18.0	35.8	41.7	100.0(1,565)	4.13
초등 1~3학년	2.7	9.8	29.0	34.7	23.8	100.0(1,565)	3.67
초등 4~6학년	13.4	21.3	37.7	20.4	7.2	100.0(1,565)	2.87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1.

3 정책 제언

가. 긴급돌봄 제도화의 필요성

- ▶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희망하는 출산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출산 시기를 지연하고, 부모의 휴직을 연장하거나 재취업이나 취업준비 시기를 늦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됨.
- ▶ 긴급돌봄 수요는 상시로 요구되는 틈새보육과 구분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돌봄서비스 기관의 종일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체계가 요구됨.
 - 긴급돌봄의 공백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요구되나 부모 등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른 하원 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와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틈새보육 수요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이 부모의 돌봄 수요와 불일치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해당 수요가 이용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포괄되기 때문임.
- ▶ 긴급한 상황이나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힘든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 긴급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제도의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아동돌봄의 공백을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나. 긴급돌봄 유형과 지원 원칙

- ▶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발생 빈도,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 인식을 토대로 1) 자녀가 아픈 경우, 2)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3) 가정내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자녀가 아픈 경우’는 주된 긴급돌봄 사유에 해당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한 정책적 수단이므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근로 상황으로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시각 출근, 주말이나 휴일 근로, 출장으로 인한 공백에 한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내양육가구에서는 추가자녀 출산, 자녀 이외 가족 돌봄,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이나 교육 이수 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간제보육은 ‘주양육자의 급작스러운 부재’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는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에서 평균 4점 (5점 만점)대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나, 초등 고학년(4~6학년)에 대해서는 3점 이하의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므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순으로 지원함.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방식은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여 다양한 부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관돌봄은 이용기관에서 긴급한 돌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함.
- 가정내돌봄의 경우는 일시연계 방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되,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모색함.

▶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으로는 우선지원 대상의 명문화와 선별적 비용지원 방식을 모색함.**

- 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으로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가구, 읍면지역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함.
-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가구, 부모 중 한 명이 임시근로를 하는 가구,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명이 비전형적 근로시간(야간, 주말 교대제 등)을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정내 양육가구는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하지만, 비용지원은 주양육자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긴급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비스 연계 활성화, 통합연령 서비스 운영,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전략을 모색할 만함.**

-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 서비스 인프라 공급 수준이 저조한 새벽, 야간, 주말보육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거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이때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해야 함.
-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유관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단위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총괄 가구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 등이 요구됨.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연령 운영: 긴급돌봄 지원대상 아동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히 아동인구 규모가 적은 읍면지역 등에서는 기존 돌봄서비스 기관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추구함.
 -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학령기 아동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유아를 지원대상에 포괄하고,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
-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수준이 지역별 공극차를 보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읍면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므로 취학전 아동의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돌봄 전문인력(보육교사 등)을 배치하고 보육실을 구비하며, 이용 절차 등 편의성을 제고함.

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 유관 서비스의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지침 보완

- 긴급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에 특화된 서비스나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돌봄과 더불어 긴급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운영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는 긴급돌봄 내실화에 관한 지침을 보완함.

▶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긴급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함.
- 다부처의 돌봄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므로 긴급한 경우 이들 서비스를 총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됨.
- 지역 단위에서 돌봄공동체에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 긴급돌봄 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의 인지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자녀 출산에 따른 현금성 급여(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신청 시 또는 해당 신청 사이트(임신·육아 포털 사이트)에 긴급한 돌봄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지역별 서비스 기관 등 상세 정보는 자치구 단위에서 오프라인(책자 우편 배송 등)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게는 입학 설명회,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 부모참여 행사에 맞추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 등을 공지함.
-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초등방과후 포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을 부각하여 이용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긴급돌봄을 신청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므로(여성가족부, 2023: 2),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라.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지원 방안

1) 아픈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 아동을 위한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에서는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아동의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의 5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함.

[표 15]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5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질병아동의 안전한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2.

- 아동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인프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질병아동의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행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격 또는 절차 등 세부사항은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례로 규정하며,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함.

2) 기관이용 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긴급한 근로 상황' 등

▶ 영유아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반별 탄력정원 편성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연장보육시간에 영유아 혼합반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 유치원에서는 초등자녀 대상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졸업생이 초등 저학년 시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개반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그 밖의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과 온종일돌봄 운영 유치원을 야간 긴급돌봄의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원 중인 기관의 운영시간을 벗어나서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아 및 초등자녀 대상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

- 급작스러운 야간근로 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의 인건비 100%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긴급돌봄 특화 기관(가칭: 긴급돌봄 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시돌봄 비중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돌봄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함.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는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3) 가정내양육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주양육자 부재' 등

▶ 시간제보육의 긴급돌봄 대응력 제고

- 시간제보육은 현재 6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표 18 참고).
- 36개월 이상 아동의 긴급돌봄을 위해 해당 연령반을 추가로 구성하여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 시간제보육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비용지원은 한 달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 총 1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표 16]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단, 제28조의2 제2호의 긴급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61-262.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 가정내양육가구에서는 긴급돌봄을 위해 파견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
 - 부모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에도 복지포(<https://www.bokjiro.go.kr>)와 정부24(<https://www.gov.kr>),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도 해당 정보를 탑재하는 방안을 모색함.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교육부(2024b).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23). 보도자료: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2023.3.20).
 -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nowyoo@kicce.re.kr

2024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